

# 예산춘추

BUDGET & POLICY

2026 | 두 번째(5월) | VOL. 82

## 특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주택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  
AI와 일자리 전환: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

## 현안 진단

미-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과제  
최근 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정책 과제

##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NABO 발간보고서 소개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 FISCAL STORY

OTT 서비스 확산과 영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조  
1929년 대공황, 100년 전 사건이  
오늘날의 경제에 주는 교훈은?  
'셰익스피어 효과'로 보는 극작가  
문화자산화의 재정 효과



# contents

2026 Vol. 82

「예산춘추」에 수록된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친환경 국회 실천을 위해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으며, 재활용이 쉽도록 표지 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 특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06
주택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2
SI와 일자리 전환: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경제정책그룹장	18

## 현안 진단

미·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과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8
최근 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조홍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34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정책 과제 서옥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2



**발행일** 2026년 5월 15일(통권 82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윤성민 기획관리관  
 위 원 장석립 총무담당관  
 김신애 추계세계총괄과장  
 위진수 홍보·공보 담당  
 간 사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애린 정책총괄담당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박연서 세계분석1과장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유민호 예산분석관 장설희 추계세계분석관 황진술 경제분석관  
 편 집 황록연 주무관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02-6788-4619 ● 02-6788-4686 🌐 www.nabo.go.kr 📺 www.instagram.com/nabokorea

##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근거기반 부동산 재산세 논의와 발전 방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50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OECD 재정 분야 주요 회의에서의 공공재정 회복 논의 전망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56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나라살림의 기반을 보여주는 조세통계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성지영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	58
NABO 발간보고서 소개	62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72
NABO 소식	76

## FISCAL STORY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조세지출	80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OTT 서비스 확산과 영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조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82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1929년 대공황, 100년 전 사건이 오늘날의 경제에 주는 교훈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86
예술 속 재정·경제 이야기: '셰익스피어 효과'로 보는 극작가 문화자산화의 재정 효과 김현식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90





# 특집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06

## 주택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12

## AI와 일자리 전환: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경제정책그룹장

18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국회는 2026년 4월 10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들어가며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추경안의 규모는 26.2조원(총지출 기준 25.2조원<sup>1)</sup>)으로 재원은 법인세 등 국세수입 중심의 세입증액경정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이다.

표 1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목적별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분	주요 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전 국민 부담 경감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민생 안정 (2.8조원)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9.7
국채 상환 (1.0조원)		1.0
총 규모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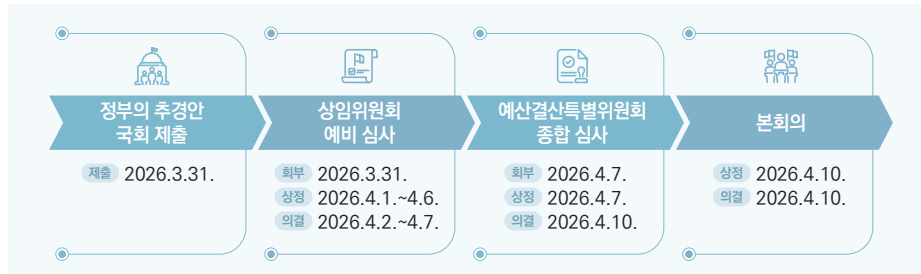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2026.3.31.)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는 2026년 3월 31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10개 상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가 4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추경안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4월 10일 수정 의결하였다. 예결위 수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되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및 유가 급등 환경에 적기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10일만에 심사를 완료한 것이다.

1) 국채상환 1조원은 보전지출이므로 총지출에서는 제외된다.

그림 1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경과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재정 총량

국회의 추경안 심의를 통해 총수입은 추경안과 동일한 700.6조원, 총지출은 추경안 수준을 유지하여 75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표 2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결과(재정 총량)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안	국회확정	본예산 대비 증감	제1회 추경안 대비 증감
총수입	675.2	700.6	700.6	+25.4	-
총지출	727.9	753.1	753.0	+25.2	△0.0
통합재정수지	△52.7	△52.5	△52.5	+0.2	0.0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107.6	+0.2	0.0
국가채무(D1)	1,413.8	1,412.8	1,412.8	△1.0	-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6.4.11.)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52.7조원 적자에서 0.2조원 개선된 52.5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107.8조원 적자에서 0.2조원 개선된 107.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조원 규모의 국채상환에 따라 2026년도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413.8조원에서 1조원 감소한 1,412.8조원으로 예상된다.

## 추경안 주요 심의 내역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용자, 보증기관 출연 등을 감액(△0.6조원)하고, 모두의 카드(K-패스) 등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을 증액(0.6조원)하여 정부안 26.2조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 세출·지출 증감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추경안(증액분)	국회감액	국회증액	국회확정
고유가 부담 완화	10.1	△0.0	0.3	10.4
민생 안정	2.8	△0.3	0.0	2.5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	△0.3	0.3	2.6
지방재정 보강 등	9.7	-	-	9.7
국채상환 등	1.0	-	-	1.0
합계	26.2	△0.6	0.6	26.2

주 단수조정에 따른 오차 발생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6.4.11.)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여(정액형 반값패스·시차 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1,027억원), ② 농어업·임업 등 전방위적인 유류비 등 지원 강화 및 비료·사료 등 농가부담 완화(+1,650억원), ③ 재생에너지 지원 및 탄소중립 촉진(+999억원), ④ 나프타 수급 안정 등 공급망 안정화(+2,049억원), 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212억원), 지역사회 휴가 지원(+40억원), 재외공관 안전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17억원) 등 총 6,358억원이 증액(총지출 기준)되었다.



반면, 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100억원), 관광사업 용자지원(△800억원) 등 미 투자금·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한 정책펀드·용자 사업 감액, ② 내일배움카드(△1,018억원)는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③ 신용보증기금출연(△5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400억원) 등 보증기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출연금 축소 등 총 6,392억원이 감액(총지출 기준) 되었다.

단일 세부사업 단위로는 가장 큰 증액 규모를 차지했던 예비비는, 추경안과 같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5조원 증액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국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다.

표 4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결과 주요 부대의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 본예산 심의 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태양광 보급지원 및 용자사업 추진 시 국내산 태양광 모듈(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부는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나프타수급안정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 및 기초유분에 대하여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수입 물량을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지침 또는 고시를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전기차 보조금)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혜자 선정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 취업 연계 현황 및 취업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 등)을 포함한 성과를 분석하여 국회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li> </ul>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마치며

국회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결과,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위기 대응이라는 당초 추경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별 조정을 거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쟁점이 제기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보다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재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및 산업 피해 최소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성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주택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 종과세 유예 종료와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종과 제도 부활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세제만 극도로 복잡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전문가조차 스스로 납세의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이다. 부동산에 따른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가 주택 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역진적 비과세 구조와 주택 수에 따른 과도한 종과체계는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들어가며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와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 제도 부활이 거론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부동산세제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 부동산 시장 현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중 구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어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 현상은 단일한 세계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불안 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은 건설 원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건설비 상승은 신규 주택 공급 원가를 높이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에서 보더라도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향방까지 좌우하는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제가 된 현실 속에서, 세계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일관된 방향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혁신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계-금융 정책의 병행도 필요하다. 자기 자금이 아닌 과도한 대출에 의존한 무리한 주택 구입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의 세계 설계가 보조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세금으로 단기간에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공급 정책·금융 규제와 함께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될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역대 최대치인 120조 9,000억원을 기록하였다[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 수입 잠정 실적」(2026.2.)]. 이 중 취득세는 27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00억원 증가하였다. 부동산 관련 세목이 지방재정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 및 시장 동향에 따른 세수 변동성은 지방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수도권은 가격 상승 압력을, 비수도권은 미분양 적체를 겪는 이중 구조 속에서 단일한 세계 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접근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중과 유예 종료: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다



세대, 주택 수, 보유기간, 지역 요건 등 복합적인 기준이 중첩된 현행 제도는 납세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 판단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복잡해졌다.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시적 유예를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이어가기보다, 이를 명확하게 종료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세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납세자의 중장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따로 있다. 주택 수에 따른 과도한 중과 제도가 지속 가능한 세제인가 하는 점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부터 2주택·3주택 중과에 이르기까지, 세대 범위와 주택 수에 따라 수억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취득 시점, 각종 예외 주택 해당 여부까지 중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를 뜻하는 이른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제가 복잡해졌다.

신고납세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부과하는 비효율이다. 세무사조차 포기할 정도로 복잡해진 제도는 사실상 부과주의적 운영에 준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담 비용 증가 등 납세협력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체계는 단순 주택 수 기준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와 보유기간 중심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 제도 부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범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가 선결 과제이다. 제도 도입의 명분보다 설계의 정교함이 훨씬 중요한 영역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율식에서 정액식으로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차익 전액을 비과세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고가 주택에는 양도차익의 80%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비율식 공제 구조이다. 이 비율식 방식은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금액이 커지는 역진적 결과를 낳는다. 10억원에 사서 20억원에 판 사람이나 50억원에 사서 100억원에 판 사람이나 같은 80%의 혜택을 받으니, 빚을 최대한 내서라도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푹푹한 한 채 현상을 세제가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수직적 공평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sup>1)</sup>가 제시한

1) 박훈 외,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25.



비율식 비과세 구조는  
고가 주택에 유리한  
역진성을 초래하므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식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례처럼,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지만,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B는 먼저 양도하는 1채에 대해 일반과세 시 약 7,000만원, 중과세 시 약 1억 5,400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역설이 제도 내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비과세 요건 자체의 복잡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세대·주택·보유·거주·가격·지역 등 6가지 요건이 중첩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 생활상의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일 조문에 무려 25개 항목으로 망라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가 비과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개선 방향은 비율식에서 정액식으로의 전환이다. 단기적으로는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판단 요건을 단순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을 사고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예컨대 평생 1회에 한해 일정 금액(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정액식 구조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미국은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한 주거주택에 대해 부부 합산 최대 50만달러를 비과세하고, 일본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3,000만엔의 특별공제를 허용한다. 금액 기준 방식은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을 단순화하면서도 실수요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투자 주택으로 과세체계를 이원화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시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요건을 단순화·명확화하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지역별 차등 요건은 일괄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역 요건은 행정 편의적 구분에 불과하며, 지역별로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세:  
단순화와 적정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체계는  
보유기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통합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맺음말:  
세무전문가 없이도  
알 수 있는 세제로**

다만 실제 개편 순서는 본문의 서술 순서와 다를 수 있다. 보유세 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이후 비과세 구조 개편과 중과체계 재설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이득을 조정하고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결합한 복잡한 이중 산식이 병존하면서 납세자의 판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별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최대 4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인데,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지는 단절 효과가 발생한다.

개선 방향으로서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보유기간만으로 공제받는 구조로 단순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일본과 같이 보유기간에 따른 단계형 세율 구조를 적용하거나, 독일처럼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대표적 사례이다. 공제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올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보유세 체계는 통합·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 양면에서 바람직하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세액공제로 연계하는 방안은 이중과세 논란을 줄이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보유세는 올려서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줄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낮추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임대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세제 강화가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 활용해 시장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잦은 개정과 중첩된 예외 규정은 세제를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였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재정수입과 조세형평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개편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를 통합·단순화한다. 두 세목은 과세 대상과 기능이 중복되어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이 제도마다 달리 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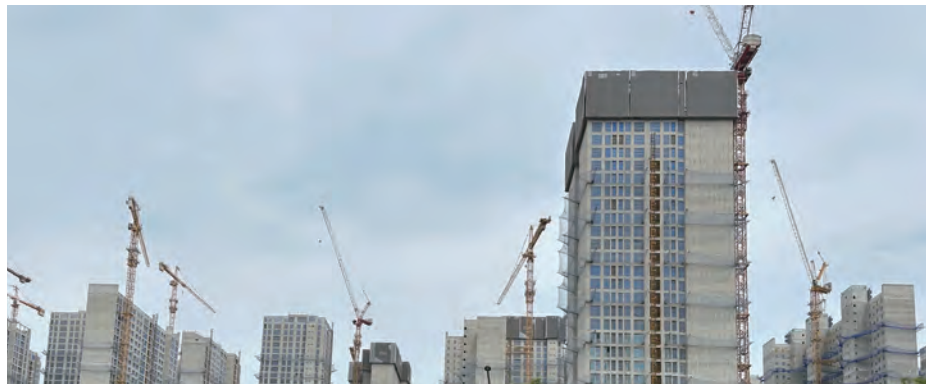
양도소득세는  
시장조절 수단이  
아니라 자산소득  
과세로서,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

되어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보유세 체계를 단일하고 명확한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이후 양도소득세 개편의 전제 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율식에서 정액식 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단순화하며 지역별 차등 요건을 폐지한다. 이 제도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납세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핵심 규정인 동시에,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액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와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분쟁과 혼란을 낳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도의 공평성과 단순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개편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두 번째 과제로 위치시켰다. 이어서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실거주·보유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과 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에, 비과세 구조가 정액식으로 정비된 이후에야 중과 여부의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순서를 앞당길 경우 두 제도 간 경계가 불명확해져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실수요 이동을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취득세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와 달리 거래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되는 세목으로, 앞선 개편을 통해 보유·처분 단계의 세 부담 구조가 안정된 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인하를 먼저 시행할 경우 다주택 취득 수요를 자극하여 보유·양도 단계의 중과 강화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순서이다.

이 모든 개편의 기준은 단순하다. 납세자가 세무전문가 없이도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조세행정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조세 회피가 늘어나며, 결국 세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 단순성, 예측가능성,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지금 부동산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는 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꾸준한 주택 공급 없이는 아무리 정교한 세제라도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 세제와 공급 정책, 금융 규제가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AI와 일자리 전환: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



AI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 혁신의 성과가 고용과 임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의 경제 성장 기여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원인도 노동시장에서의 채택 수준과 신규 업무 창출 가능성에 대한 가정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취업자의 과반 이상이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학력별 일자리 이동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술 전환의 영향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로 경력 사다리의 하방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경제정책그룹장

## 우리는 왜 AI와 노동에 주목하는가?

그간 노동시장은 기술 진보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핵심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술이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의 산출이 증가하고 이는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이라는 경로를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성장-고용-임금이라는 연결고리는 기술의 혁신이 거시적 성장을 넘어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다주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AI의 발전은 생산성 밴드웨건의 연결고리를 온전히 작동시킬 수 있을까?

AI가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러 미시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AI가 사람의 노동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고용이 축소되고 임금 상승의 통로가 차단되므로 성장의 과실은 자본에만 집중될 수 있다. 오랫동안 유망 기술에 머물러 온 AI가 그 자체로 범용 기술로 거듭나며 기업은 AI를 도입하며 업무를 재편하고 있고, 근로자와 구직자는 AI 역량이 채용과 근무 조건에 포함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AI 시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에 머무르기보다 통로 그 자체가 훼손될 수 있음에 집중하고자, AI의 거시경제적 성장 효과는 노동시장을 통해 어떻게 발현 혹은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다수의 증거를 통해 살펴본다.

## AI 성장 효과의 왜곡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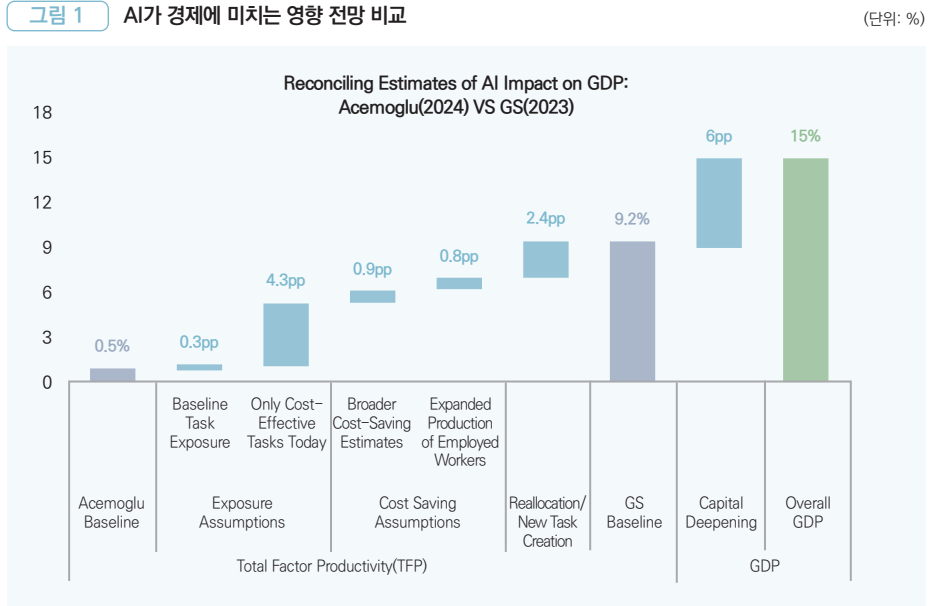
AI의 잠재력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시장을 거치며 그 효과가 왜곡되거나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엇갈린 성장 전망

AI의 경제 성장 기여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으며 그 차이의 원인은 AI가 노동시장에서 채택되는 수준과 재고용·신규 업무 창출 가능성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일례로 주요 컨설팅사인 골드만삭스는 AI가 총요소생산성을 9.3% 상승시켜 향후 10년간 미국 GDP가 약 15% 상승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반면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53~0.71%, GDP 상승분은 약 0.93~1.6%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Goldman Sachs, 2023; Acemoglu, 2025).

모두 동일한 경제학 분석 틀에 기초하였음에도 골드만삭스는 AI에 노출된 대부분의 업무에 AI가 도입되는 완전한 채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재고용을 가정하는 반면, 아세모글루는 비용 효율 측면에서 실제로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제한적이고, 신규 업무 창출 수준도 미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관측치에 대한 옳고 그름에 집중하기 보다 이 차이가 기인한 가정에 주목해 본다면, 결국 AI의 잠재력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시장을 거치며 그 효과가 왜곡되거나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자료 Goldman Sachs(2024)

### 기술 진보의 방향성과 노동소득분배율

기술 진보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노동이나 자본 중 한 생산요소에 특화되어 발전하는 ‘방향성(directed technical change)’을 지닌다(Acemoglu, 2002). 노동 절감형 기술이 우세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총수요 기반이 약화되어 성장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IMF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소속의 두 경제분석가는 단순한 모형 내에서 ‘생산성 충격’과 ‘대체 충격’이라는 두 경로로 단순한 모형을 상징하여 AI가 자본과 노동의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면 생산성 충격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지만,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치우치면 대체 충격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바 있다(Drozd and Tavares, 2025).

한국은 이러한 위험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Aum and Shin(202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노동 간 대체 탄력성은 1.6으로 추정되어 설비-노동 간 대체 탄력성(0.6)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한국의 1980~2018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77%는 자본에 투입된 기술 진보가 원인이며, 그중 67%는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AI를 소프트웨어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한국 경제는 AI 전환기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위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실증적 증거



추정된 노출도  
지표만으로는 실제  
직종의 고용 규모  
변화나 실제 대체  
범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 업무의 잠재적 노출과 실제 노출 수준의 간극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주류 프레임워크는 ‘업무의 분절성’에 근간을 둔 업무 기반 접근법(task based approach)이다. 한 직업은 단일한 업무가 아닌 여러 개의 업무로 구성된다는 가정으로, 업무 기반 접근법에 기반해 각 업무의 AI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가중합하여 직업별 AI 노출 지표를 도출한다. 측정 방법도 초기의 인간 전문가 판단에서 알고리즘 기반 유사도 분석을 거쳐, 최근에는 LLM을 활용해 대규모로 업무별 AI 노출도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 접근법은 직업 전체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직업 내 업무 수준에서 AI의 차등적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다. 먼저, 추정된 노출도 지표만으로는 실제 직종의 고용 규모 변화나 실제 대체 범위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출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직업의 업무가 AI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고용 변화는 기업의 도입 결정, 비용 구조, 조직적 관성, 규제 환경 등 다수의 중간 변수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출도 지표는 ‘잠재적 노출’을 측정하는 것이지 ‘실제 노출’이 아니다. 다수의 연구(Eloundou et al., 2023; 문아람, 2025)는 이러한 잠재적 노출도에 기반해 AI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하지만, 현실에서 그 업무에 실제로 AI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례로 Anthropic이 2025년 2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Anthropic Economic Index(AEI)는 실제 Claude





“ AI 노출 수준은 대체 효과와 증강 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보완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노출도만으로 영향을 판단하면 과대 추정의 위험이 있다. ”

사용자의 약 100만건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AI가 경제 전반에서 어떤 업무에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추적한다(Handa et al., 2025). AEI의 최신 보고서(2026년 1월)에 따르면, 초기 분석에서 약 36%의 직업이 업무의 25% 이상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4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업무의 성공률을 가중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의 분포는 달라진다. 잠재적으로는 높은 노출도를 보이지만 실제 사용은 저조한 직업이 있고, 반대로 이론적 노출도는 낮지만 실제 활용이 집중된 직업도 존재하는 것이다.

AI 노출 수준은 대체 효과와 증강 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보완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노출도만으로 영향을 판단하면 과대 추정의 위험이 있다. AI는 업무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량을 증강하기도 한다. AEI 데이터에서도 2025년 11월 기준으로 증강적 활용(52%)이 자동화적 활용(45%)보다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서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있어 방식을 차용하여 직업별 업무 환경(커뮤니케이션, 책임, 물리적 조건 등)과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교육·훈련 수준을 바탕으로 AI 보완성 지수를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IMF가 추정 한 잠재적 보완성 지표에 기반했을 때와 AEI가 산출한 실제 보완 수준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문아람, 2025).

###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

방법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는 유사한 경향성을 포착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취업자 중 과반 이상이 AI 노출 수준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드러난다. 인구경제학적 특성별로 본다면 여성일 수록, 고등학교 혹은 전문대 졸업자일수록, 25~44세 집단일수록 AI 노출 수준에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소득 하위 분위 집단일수록 노출도가 높으면서도 보완 수준이 낮은 직업의 비중이 크게 포착된다.



AI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제인 직업 간 이동성의 기회에 있어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



### 일자리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AI는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과 생애주기 소득 수준 향상의 기회인 직업의 이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기술은 기존 직무를 변화 혹은 직업을 창출하며 노동시장이 수요하는 역량에 변화를 가져와 근로자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는 경력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AI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제인 직업 간 이동성의 기회에 있어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AI의 노출도가 높은 직업이 과반을 차지하여 광범위한 일자리 전환이 요구될 수 있으나 변화에 적응하는 핵심 기제인 이동성은 집단별로 불균등하여 이동 장벽은 높아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 전환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기존 직업군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직업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으로 AI 보완성이 낮은 직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학력별 이동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학력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수직적 이동을, 저학력 노동자는 수평적 이동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았다. 동시에 AI 노출 수준 직업 유형별 생애주기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완수준이 높은 직업일수록 생애주기 소득도 증가하여, AI는 기존 학력별 소득 격차를 더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I가 경력 사다리 하방에 위치한 청년에게 가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경력 사다리 하방 붕괴에 대한 우려

최근에는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AI가 경력 사다리 하방에 위치한 청년에게 가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노동수요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rynjolfsson, Chandar and Chen, 2025)에서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고노출 직군의 22~25세 고용이 상대적으로 13%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경력 사다리의 하방 붕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사한 분석틀에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주요한 정책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한 바 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에서 ChatGPT 출시 이후 AI 고노출 직업의 청년 고용 변화율이 오히려 1.2%p 상승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생성형 AI가 고용을 줄였다는 유의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 Yale Budget Lab은 미국 노동통계(CPS)를 월별로 추적한 결과, AI 노출도와 고용·실업 간 유의한 관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엇갈리는 연구 결과는 AI에 의한 직접적 고용 대체가 아니라 기술 전환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일시적 채용 보류일 가능성도 있어,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 어떤 원인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입직 감소는 국가의 인적 자원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청년의 일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시급하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노동친화적 AI

노동시장에 대한 AI의 영향은 일방향이 아니었다. 거시경제적 성장 효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은 기술의 방향성과 제도적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시점은 거시적 고용 붕괴보다는 구조적 재편의 초기 단계이지만, 청년 층과 중숙련 직무에 대한 비대칭적 충격이 관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업무 기반 접근법의 한계인 잠재적 노출과 실제 노출의 간극, 보완 효과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노출 지표 간 불일치 등을 인식하고, 단일 지표에서 도출된 수치 그 자체에 의존한 단편적 대응보다 다양한 증거에서 나타나는 일치된 경향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속도'만이 아닌 '방향'  
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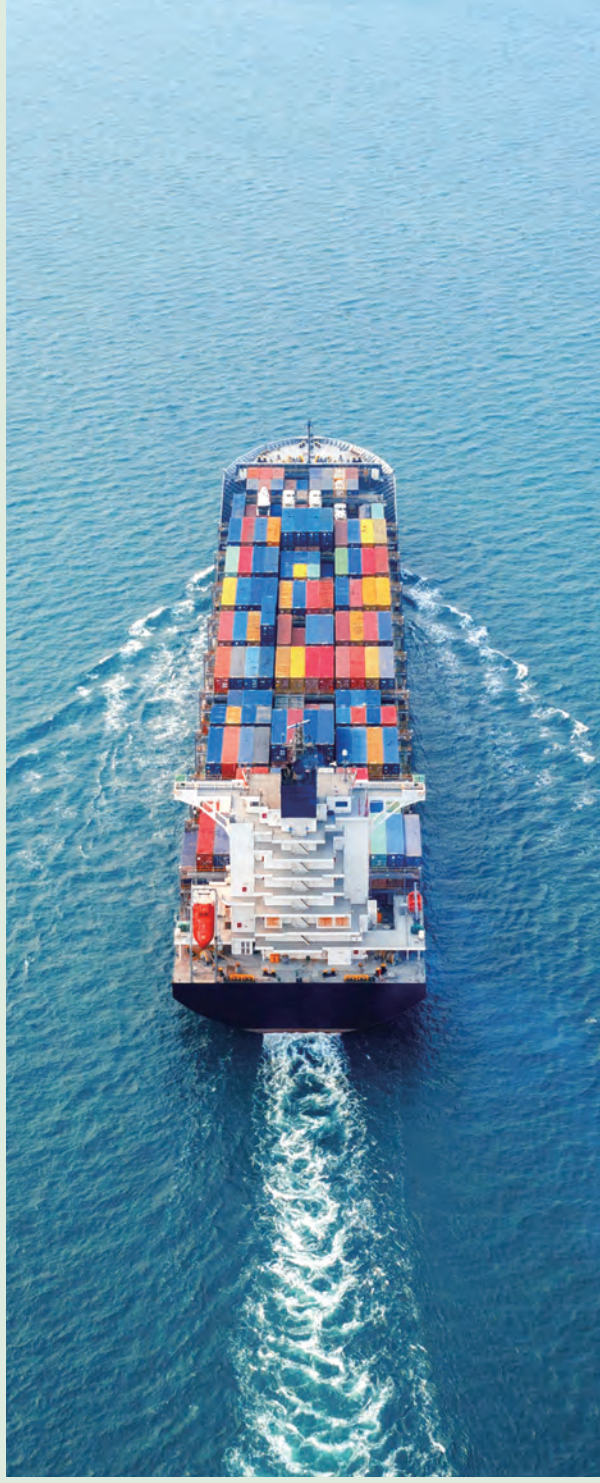


AI 노출도가 높은 고용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기술 전환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모두에 민감하다. 따라서 단순한 일자리 보호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 가능한 역량 확보라는 관점에서 경력 사다리의 복원과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AI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도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고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수준부터 산업·직장 수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여 질서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이 기술선도 성장의 초기 촉매로 기능하는 만큼, 이를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속도'만이 아닌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AI가 인간의 역량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확장하는 협력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친화적 AI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야말로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임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

#### | 참고자료 |

- 문아람, "모두의 진짜 성장을 위한 AI 에이전트 경제 전략", 「프리미엄리포트」 25-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 문아람 외, 「2035 AI·디지털 대전환 미래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 문아람 외,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 천경록,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5호, 국회예산정책처, 2026.
- Acemoglu, D.,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Economic Policy*, 40(121), pp.13-58. 2025.
- Brynjolfsson, E., Chandar, B., & Chen, Ryu,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BER working paper, 2025.
- Goldman Sachs,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Goldman Sachs, 2023.
- Goldman Sachs, "Gen AI: too much spend, too little benefit?", *Top of Mind*, Goldman Sachs Top of Mind Issue 129, 2024.



# 현안진단

## 미·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과제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8

## 최근 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조홍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34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정책 과제

서육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2

## 미·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과제



글.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미·이란 전쟁은 원유 공급의 특정 지역 편중 구조가 지닌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동산 원유 도입 의존은 공급 차질 위험과 함께 도입 비용 변동성을 확대시켜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중동에 집중된 원유 수입 구조를 완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 내 갈등이 GCC 산유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들과의 에너지 및 건설 부문 협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중동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중동 협력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SHINE Initiative)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AI, 첨단 모빌리티 등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방산 등 부문에서 중동 지역의 수요와 한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 들어가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요 인프라 타격은 주변 산유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활동 차질로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다.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 내 8개 산유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은 31%에 달한다. 2026년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이 일일 118만 배럴 정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쟁으로 중동 내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도 역대 시추기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완공 유정 수도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간 내 생산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에 그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급격히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4월 중순 90~110달러 사이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가격도 MWh당 31.6유로에서 40~50유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전이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자가 원고를 쓰고 있는 4월 중순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미·이란 전쟁은 우리에게 중대한 경제적 과제를 남겼다. 본고는 미·이란 전쟁 발발이 우리 경제에 미친 주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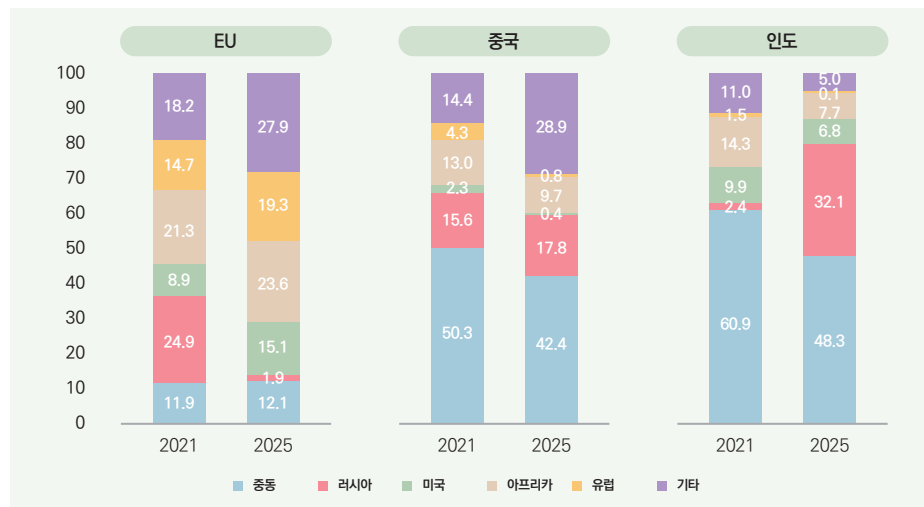
## 중동산 원유 의존과 수급 불안정성 확대

우리는 2025년 기준 전체 원유 도입 물량의 69.1%를 중동으로부터 들여왔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우리 원유 수급의 3분의 2 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일종의 상수처럼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간 대비가 소홀했던 만큼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는 한편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공급 차질 규모가 큰 만큼 단기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주요 에너지 시설 파괴로 사태 진정 후에도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원유 수급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대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일시적으로 50%대까지 하락한 적도 있지만, 이후 빠르게 상승하며 3년 연속 70% 안팎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원유 도입에 있어 운송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2025년 기준 중동산 원유의 평균 수송 단가는 배럴당 1.87달러로 중동 외 지역 평균인 2.99달러보다 1.12달러 더 낮으며, 미국산 원유 수송 단가는 3.93달러 수준으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국내 정유설비 구조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도 중동 의존 구조의 배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질 및 저황 원유를 사용할 경우 기존 설비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제품 생산 구조가 달라지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을 높여 중동 의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U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입선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재편하였다. 실제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EU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은 24.9%에서 1.9%로 23%p 하락한 반면, 미국, 유럽,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 도입 비중은 각각 6.2%p, 4.6%p, 2.3%p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 주요 원유 수입처인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 비중을 7.9%p, 12.6%p 줄였다. 즉 중동 외 국가로부터의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중동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1 EU, 중국, 인도의 러·우 전쟁 전후 주요 원유 수입원별 비중 비교 (단위: %)



주 EU는 수입액, 중국과 인도는 수입량 기준임  
 자료 유광호, 이다은, 백하은,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9 No.24, 2026.

## 원유 수급의 특정 지역 의존, 도입 비용에도 부정적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유가 추이만으로는 우리 정유사의 전체 원유 도입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도입 비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순 가격 수준 외에도 유종 간 가격 차이, 수출처의 가격 정책, 운송에 따른 부대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 미·이란 전쟁 발발로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우선 중동산 원유의 벤치마크 가격과 여타 유종 간 가격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제유가는 지역별 시장 구조와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 형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3대 유종을 함께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아 두바이유 가격이 특히 중요한데, 전쟁 발발 이후 중동산 원유의 상대적 희소성이 확대되면서 두바이유와 다른 벤치마크 유종 간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다. 전쟁 이후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간 가격 격차는 배럴당 최대 70달러 수준까지 확대된 바 있으며, 이후 스프레드가 일정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브렌트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의 OSP(Official Selling Price) 상승도 도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OSP는 각 산유국이 벤치마크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산정하는 자국산 원유의 공식 판매가격이다. 중동 산유국들은 글로벌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때마다 공급자 우위 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OSP를 인상해 왔다. 금번 전쟁 발발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대표 유종인 아랍경질유의 5월 인도분 대아시아 OSP를 사상 최대치인 배럴당 19.5달러로 인상하였다. 즉, 우리가 2026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기 위해선 두바이유·오만유 가격에 배럴당 19.5달러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도 변수다. 최근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배럴당 1달러 수준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로 차등 적용 가능성도 있어 한국과 같은 미 동맹국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GCC 산유국으로의 전선 확대와 중동과의 경제협력 위축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중동 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일정 영향을 받았으나, 애초에 이란과는 미국발 제재로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시 지리적 거리 등의 이유로 협력 규모가 크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문제는 이번 미·이란 전쟁 발발을 계기로 중동 내 갈등이 우리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 미군 기지뿐 아니라 GCC 내 주요 에너지, 항만, 관광 인프라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역내 상당 규모의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히 GCC 국가들은 에너지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입 물자 수급 불확실성도 확대되었다. GCC 국가들은 식량을 포함한 주요 소비재와 산업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과 외국인 투자 위축, 건설 자재 및 노동력 수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우디 비전 2030 등 주요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GCC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표 1** 한국의 대GCC 경제협력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달러, 건, %)

국가	교역		해외 건설 수주		해외 직접투자	
	수출	수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GCC(A)	12,817	62,854	42	8,217	105	154
사우디아라비아	4,860	27,432	14	2,850	31	48
UAE	5,663	14,117	18	2,456	62	68
카타르	833	9,923	6	2,852	6	7
오만	660	2,789	-	-	2	5
쿠웨이트	661	7,924	4	59	2	2
바레인	141	670	-	-	2	24
중동(B)	20,330	77,883	53	11,883	124	84
세계(C)	709,330	631,895	589	47,265	3,444	47,359
중동 대비 GCC 비중(A/B)	63.0	77.9	79.2	69.1	84.0	81.9
세계 대비 GCC 비중(A/C)	1.8	9.9	7.1	17.4	3.1	0.3

주 1. 2025년 기준  
 2. 여기서의 중동은 GCC 6개국과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총 18개국을 의미  
 자료 유광호,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9 No.18, 2026.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GCC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GCC 내 환경 변화는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CC는 우리 대중동 수출의 63%, 수입의 77.9%, 해외건설 수주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외에도 GCC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석고(오만, 74.1%), 헬륨(카타르, 68.2%), 트리에탄올아민(사우디아라비아, 58.1%), 나프타(UAE 등, 48.4%), 백색 시멘트(UAE, 41%) 등의 수입 차질로 관련 산업 생산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GCC 경기 둔화에 따라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요 위축이 예상되며, GCC를 경유해 이란으로 유입되던 재수출 물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 부문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지 자재 및 노동력 수급 불안으로 기존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GCC 국가들의 재정 여건 악화로 신규 발주 감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GCC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한국의 대GCC 주요 고의존 수입 품목

(단위: %)


품목(HS 10단위)	국가	비중	관련 산업 및 제품	GCC 외 주요 수입처(비중)
석고(2520101000)	오만	74.1	건설	태국(13.0), 모로코(9.7), 중국(2.4)
헬륨(2804291000)	카타르	68.2	반도체, 의료기기	미국(27.6), 러시아(2.4), 호주(1)
트리에탄올아민(2922150000)	사우디	58.1	계면활성제, 시멘트, 화장품	미국(16.9), 말레이시아(9.3), 태국(6.7)
나프타(2710124000)	UAE 등	48.4	석유화학	알제리(11.8), 인도(9.3), 그리스(4)
백색 시멘트(2523210000)	UAE	41.0	건설	이집트(29.5), 말레이시아(23.6), 중국(3.7)

주 2021~2025년, 중량 기준

자료 유광호,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9 No.18, 2026.

## 마치며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미-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우선 원유 수급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도입 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중동에 집중된 원유 수입 구조를 완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중남미나 아프리카로부터 원유 수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운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금융, 보험, 장려금 등으로 넓히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동산 원유와 상대적으로 유질이 비슷한 베네수엘라,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믹스 전환을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원유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유 설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유종 투입 시에도 수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정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중동, 특히 GCC에 대한 경제 협력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그동안 에너지 및 건설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존 협력 분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특히 취약할 뿐 아니라 이번 전쟁이 특이점으로 발현되면서 역내 새로운 진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번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SHINE Initiative)'를 활용할 수 있다. 샤인 이니셔티브는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핵심축으로 평화, 번영, 문화 분야에서 한국과 중동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동 산유국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AI, 첨단 모빌리티 등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이를 통해 추진해볼 수 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방산도 중동 지역의 수요와 한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 최근 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글. 조홍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가계 신용 확대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함께 주가 변동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 과잉 투자 및 창조적 파괴의 변동성 우려, 케빈 워시 차기 미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감축 가능성, 일본의 소비세 감면에 의한 재정 확대 경계감 증대 등 대외 충격이 상호 연계성 높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로 파급되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금융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 주가 큰 폭 상승 후 변동성 확대

우리나라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요 호조 및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주가수익비율(PE, Price-to-Earnings Ratio)과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to-Book Ratio)이 가파른 주가 오름세에 따라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PER과 PBR은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년 들어서도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방산, 원전, 금융 등 업종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3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주가 동향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부터 자산운용사 MMF 및 수익증권 등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와 함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의 예금과 퇴직연금 자산, 은행 신용대출 및 증권사 신용융자 자금 등이 자산운용사 주식형펀드 등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상당폭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거래 자금의 유입은 주가 상승과 함께 증권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이 크게 늘어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권회사로의 자금 유입 확대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군집 행동(herd behavior)에 의해 야기되는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증권회사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단기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증권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증권회사 신용용자 잔액이 30조원을 상회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활용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위험 추구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가 변동성 커 종합적 고려와 주의 필요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내외 금융 여건이 악화하거나 시장 심리가 동요하는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 AI 관련 주식 고평가 논란이 부각된 지난해 11월 들어서는 AI 서비스 기업과 인프라 및 하드웨어 제공 기업들이 상호 간에 투자와 제품 구매 계약을 이어가며 순환거래의 행태를 보인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진 바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시중 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 채널을 통해 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 있어 대내외 충격 발생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쟁 등과 같은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급격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신용 흐름 완만한 공급 증가세 지속

신용 흐름을 보면 신용공급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은행 대출금리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향후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기타대출도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증가 규모가 월 1조원대에 그치는 등 둔화세를 이어갔다.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 부담이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소폭 낮아진 가운데에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 평균 대비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 당분간 둔화 흐름 유지

향후 가계대출은 정부 유관 정책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 기대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의 증가폭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차입 수요를 어느 정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금리 측면에서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가계대출 금리 하락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서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은 지난해 말 부실채권 정리의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아졌다.

## 가계대출 상방 리스크 경계심 늦추기 어려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이 총량 측면에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국내외 주식투자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계대출의 상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부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면서 저신용, 취약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자금조달 여건 변화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당위가 있다.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내외 요인 복합 작용

최근 금융시장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는 대외 충격의 국내 파급, 금융시장 간 연계를 통한 확산, 국내 투자자금 흐름 등 다양한 측면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충격의 일차적인 효과를 보면 금년 들어 글로벌 AI 과잉 투자 및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변동성 우려,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감축 가능성, 일본의 소비세 감면에 의한 재정 확대 경계감 증대 등 대외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가, 금리, 환율이 상호작용하는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다.



## 글로벌 AI 과잉 투자 및 창조적 파괴의 변동성 우려

먼저 금년 2월 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 AI 부문의 과잉 투자 우려가 부각되고 AI의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대체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은 국내 주식시장에 하방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주요 AI 기업들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자본적 지출 전망은 글로벌 AI 기업 간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으며 특히 AI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국내 주식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AI 자동화 도구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창조적 파괴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다.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 법률 및 금융 리서치 자동화 AI 모델을 연이어 발표하자 S&P 500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주가지수가 급락한 바 있다. 우리 경제가 이로 인하여 받을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약화로 이어졌다.

## 케빈 워시 차기 미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감축 가능성

또한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으로 달러화 유동성 축소 우려가 부각된 점도 외국인 주식투자의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하여 주가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시장은 워시 지명자가 펼쳐 온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주장에 주목하며 달러화 유동성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우려는 그간 급등세를 보였던 금, 은 및 가상자산 가격의 급락을 초래하며 파생상품의 자산 매도로도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글로벌 펀드들은 주가 급등 및 투자 비중 증대로 차익 실현 유인이 커진 한국과 대만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일본의 소비세 감면에 의한 재정 확대 경계감 증대

아울러 일본의 소비세 감면 및 조기 총선 추진으로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국내 금리의 상방 압력을 증대시켰다. 국내에서도 금년 초 추가경정예산 이슈의 부각과 국고채 발행 물량의 부담 등으로 채권 수급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던 만큼 일본의 재정 확대 관련 이슈는 국고채 금리 상승세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정 확대 우려에 따른 엔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였다.

주식/채권시장,  
주식/외환시장,  
외환/채권시장 간  
연계 작용

이와 같은 대외 충격이 국내로 파급된 이후 자금흐름 등의 국내 요인과 결합되어 주식/채권시장, 주식/외환시장, 외환/채권시장 간 연계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년 들어 국내 주가의 추세적 상승 기대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채권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약화되어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그간 꾸준히 유입되었던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금년 1월 하순부터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선 것은 외환시장의 수급과 기대심리를 악화시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은 그동안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화 수요 압력을 완충해 왔으나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이 대규모 유출세를 보이면서 외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증대되었고 이는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와 엔화 약세 우려 등과 맞물리면서 원화가 주요국 통화에 비해 더 약세를 나타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환율 상승은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약화시키며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금흐름 측면에서 보면 주가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시중 투자 자금이 채권, 예금 등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고 최근 이러한 흐름이 심화되면서 각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급증한 반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은 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수요 위축으로도 이어져 시장금리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쏠림에 대한 반작용으로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둔화하면서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취약해진 심리를 더욱 악화시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및  
효과적 금융안정  
정책 긴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외 충격이 국내로 일차 파급되고 높아진 상호 연계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 및 증폭된 데 따른 현상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진 점은 그간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차익 실현 등 조정 압력이 상당히 누증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



로벌 패권 경쟁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등 제반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향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수시로 나타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한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파급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금융안정 정책에 있어 중앙은행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조사연구 및 정책 수행 경험은 소중한 지적 자산과 경험(institutional memory)이 된다. 아울러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을 포함한 유관 정책당국(stakeholders)의 동시적 권한(concurrent authority)이 작용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협력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요청되는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금융안정 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이 지닌 지적 자산과 경험을 토대로 발휘하는 협력적 정책 이니셔티브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새로이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역량을 기대한다. 🌐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정책 과제



글. 서옥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 비중은 5.8%에서 6.8%로 꾸준히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20대의 수도권 순유입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40대 이상은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세대 간 역방향 이동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도 간 이동의 주된 원인은 직업으로, 일자리가 청년 지역이동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는 눈높이·기술·지역 미스매치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며, 산업수요와 대학 교육 간 괴리, 좋은 일자리 부족이 청년의 역외 유출과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청년이 성장하고 배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지역 간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 비중이 2015~2025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입 현상이 뚜렷하다. ”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2015~202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이동자 수 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 비중은 2015년에 5.8%였으나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6.8%로 증가했다. 반면 동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수 비중은 6.2%로 변동이 없다.

2025년 20~29세 인구 순유입률을 보면 서울 2.8%, 인천 1.5%, 경기 0.5% 등으로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입 현상이 뚜렷하고, 대전, 세종, 충북 등으로도 20대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6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20대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 인구 순유입률은 인천, 세종, 충북, 경기, 충남 등이 높은 편이며, 순유출률은 광주, 서울, 경북 등의 순으로 높다.

표 1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2025년)

(단위: %)

구분		20~29세	30~39세	40~59세	60세 이상
수도권	서울	2.8	-1.3	-0.8	-1.0
	인천	1.5	1.8	0.9	0.7
	경기	0.5	0.7	0.0	0.3
중부권	대전	1.2	0.1	-0.1	-0.1
	세종	0.8	1.6	-0.6	-0.3
	강원	-2.5	-0.3	0.4	0.3
	충북	0.3	1.1	1.0	0.6
	충남	-0.5	0.6	0.7	0.6
영남권	부산	-1.3	-0.7	-0.3	-0.3
	대구	-1.9	0.1	-0.1	-0.2
	울산	-1.0	0.0	-0.3	-0.4
	경북	-3.9	-0.8	0.2	0.3
	경남	-3.1	0.2	0.2	0.2
호남권	광주	-3.0	-1.6	-0.7	-0.4
	전북	-3.1	-0.4	0.3	0.2
	전남	-3.1	0.5	0.9	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26.

2025년 수도권 순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20~30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20대 순유입이 뚜렷하고, 40대 이상은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2025년)

(단위: 천명)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수도권	48	2	-4	-9	-9
중부권	-2	4	4	6	8
영남권	-29	-4	-1	0	-1
호남권	-16	-3	1	3	2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26.

시도 간 전입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32.5%)이며 가족(28.8%), 주택(18.0%), 교육(9.2%), 주거환경(3.8%) 등의 순이다. 전체 이동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33.7%), 가족(25.9%), 직업(21.4%), 교육(6.0%) 등의 순인 것과 비교할 때, 시도 간 이동의 주된 이유로 직업<sup>1)</sup>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시도 간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및 비중(2025년) (단위: 천명, %)

구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시도 간 이동자 수	2,186	711	631	394	200	83	33	133
비중	100.0	32.5	28.8	18.0	9.2	3.8	1.5	6.1
전체	6,118	1,310	1,584	2,065	366	322	67	405
비중	100.0	21.4	25.9	33.7	6.0	5.3	1.1	6.6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26.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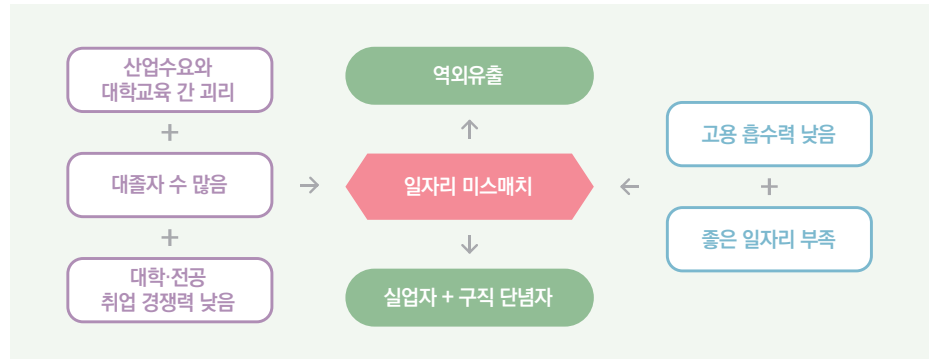
일자리란 20~30대 청년층의 지역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청년을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위축, 지역 불균형 문제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으로의 역외유출이라는 인식하에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는 일자리 눈높이 미스매치, 기술 및 숙련 미스매치, 지역 미스매치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 일·가정 양립 및 근로복지 향상 지원, 지식학협력 강화, 직업훈련·현장실습인턴 확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즉,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수도권으로의 역외유출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편의시설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 및 직업훈련 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괴리, 대학 및 전공의 낮은 취업 경쟁력,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 부족, 낮은 고용 흡수력 등의 문제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는 청년층의 역외유출 및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균형

1) “직업”으로 인해 전입한 경우의 주요 사례는 취업·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직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이 있음. 전입사유 중 “가족”은 결혼·이혼·별거·사별, 분가·독립,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이 있음. “주택”은 내 집 마련, 전세·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주택규모 변경·집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있음. “교육”은 진학·학업,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이 있음.

그림 1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와 역외유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최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각각 따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사업, 월세·전세 주거비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산업단지 인근에 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사업과 산업단지 인근 중소기업 근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각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전·월세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 정책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대학교육 - 직업훈련 - 지역고용 -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확립, 지역통합 및 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지방에서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쉽도록 지원함으로써 낮은 임금 보완, 근무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의 핵심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고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교육체계와 산업현장에서의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지역고용 확대와 정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라이즈(RISE) 사업<sup>2)</sup>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시

2)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공식 명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교육부는 대학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이양하여 지역사회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함. 지방정부는 대학과의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함.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며 산학협력과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스템 개편과 지역고용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라이즈 사업, 산학협력 사업 등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일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도록 체계화가 가능하다. 산학협력 강화로 대학교육-직업훈련-지역고용-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와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을 통한 산학협력과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 실습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 수업을 개설하여 현장실습에서 배운 내용과 이론 수업을 접목하고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단순 학점 인정이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 내에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년 동안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인재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단일 지방정부 중심의 청년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통합 및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의 단일 지방정부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항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수도권으로의 청년 역외유출 완화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범위를 넓혀 청년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 성장 거점과 3개의 특별 자치 구역으로 재편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발맞춰 청년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극 3특 전략의 성패는 광역경제권역 내의 전략산업이 실제 청년 일자리로 얼마나 잘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 권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해당 분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수요가 발생하며, 거점 국립대 육성 사업이 동반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 일자리, 주거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남권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와 AI·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부산·울산·경남 소재 대학들의 AI·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면 지역 내 교육-취업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호남권의 AI 재생에너지 벨트는 에너지공학·전력전자·데이터 분석 분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

한 발 더 나가 지역 강소기업이 전략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R&D 보조와 규제 특례를 연계하여 제공할 경우, 단순한 대기업 유치를 넘어 청년이 선호하는 혁신적 중소·중견기업 생태계가 권역별로 형성될 수 있다. 5극 3특 전략을 통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직면했던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생태계 부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산업·광역교통·지역대학·재정분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권역별로 시스템화하고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전환



일자리·주거·교육·  
복지의 종합적 연계와  
광역경제권 중심의  
전략적 접근,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청년고용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적 과제이다.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이 청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청년층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연계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직업훈련-지역고용-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식학협력을 내실화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일 지방정부 단위를 넘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특화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이 성장하고 배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 WORK & REPORT

---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근거기반 부동산 재산세 논의와 발전 방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50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OECD 재정 분야 주요 회의에서의 공공재정 회복 논의 전망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56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나라살림의 기반을 보여주는 조세통계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성지영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

58

NABO 발간보고서 소개

62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72

NABO 소식

76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 근거기반 부동산 재산세 논의와 발전 방향



글.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했다. 지난 3월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청하고 촘촘하게 물 썰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유세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0.15%) 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와 관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 중 하나로 보유세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용한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부동산 자산 가치

총액에 부동산 세수 총액을 나눠 구했다. 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토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산정을 위한 모수를 높이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 데이터 기반 접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효세율이 낮게 잡힌다. 각국이 부동산 재산세 부담률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국제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송경호, 2024). 실제 부동산세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세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는 GDP 대비 0.93%로 집계된다. 38개 회원국 평균인 0.94%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는데, 재산세 자체는 낮은 게 맞지만 종부세를 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 부담률은 낮지 않다.

도시별 보유세 역시 단순 비교가 어렵다. 미국만 해도 주마다 부동산 과세를 위한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이 다른데 시세가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 거래가 잦지 않은 주택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비교를 하려면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 전반을 함께 놓고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부동산 집중도(민간보유 부동산 자산/GDP)가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윤영훈, 2021). 한국의 총조세 수입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수입 비중

은 2023년 기준 4.9%로 OECD 평균인 3.8%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 역시 OECD 평균과 같은 0.9%로 나타나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주변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13.1%, 영국은 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독일은 1.5%, 이탈리아는 3.9%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상당히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2025)이 퍼낸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다. OECD 평균인 1.8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01%로 OECD 평균인 0.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총조세 수입 중 거래세가 보유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택 부문 거래세 수입은 13조 5,000억원으로 보유세 수입 합계인 7조 2,000억원 대비 2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세는 9조 5,000억원, 양도세는 4조원이 건넜다. 반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6조 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는 1조 800억원이 견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취득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23%에 해당하는 27.5조원이며 지난 2021년도 30%, 33.7조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가격 및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가 202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 양도소득세 수입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처음으로 전체 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21.3%)이 종합소득세 비중(20.7%)을 상회하였고, 2021년에는 그 비중이 32.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2025년에는 15.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규모로는 2021년 36.7조원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해 2025년에는 19.9조원 수준이다.

윤영훈(2021)은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하고 있으며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는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한

다. 이는 OECD 분류상 재산세로 분류되어 있는 금융 및 자본거래세 비중(OECD 평균 대비 약 4배)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GDP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높은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실효세율(2018년 기준 0.16%)은 주요 8개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대리변수를 활용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 결과는 3.9%로, 추정이 가능한 국가인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의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렵지만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이 1%에 가까워 OECD 평균 0.15%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이론에 따르면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 건축물 공급의 탄력성, 공공서비스의 자본화 등의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분보다 토지분에 높은 재산세 세율이 부과되어야 한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토지보다 건축물에 높은 재산세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재산세의 기본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차은혜·이석희, 2021). 물론 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주택, 그중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가리킨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는 편익기준(benefit principle)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 인세, 능력과세, 정책적 목적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세와 일부 성격이 다르지만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보유세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규모 및 비중(2018년)

(단위: %)

OECD 구분		우리나라		OECD 평균	
		GDP 대비	재산세 구성	GDP 대비	재산세 구성
재산세 항목	부동산보유세	0.82	26	1.07	58
	금융/자본거래세	1.89	61	0.45	24
	상속증여세	0.39	13	0.13	7
	순자산세	0	0	0.16	9
	비반복적재산세	0	0	0.04	2
	기타 재산세	0	0	0.01	1
재산세		3.1	100	1.86	100
양도소득세		0.95		0.15	
합계		4.05		2.01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2021



2025년 재산세 징수액(15.8조원)은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재산세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9.9조원에서 2022년 16.3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징수 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2024년은 징수 실적과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5년은 징수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 대비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4.7조원으로, 2022년 6.8조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주택 신규 공급 확대, 전국 주택공시가격 상승(3.3%), 전국 토지 가격 상승(2.7%)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다.

최근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서민 주거 불안정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가계 자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주택 가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이후 제도의 시행 및 변화는 주택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세 부담 분석 결과 세율 인상보다 과표현실화를 제고가 보유세의 누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세 강화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취약 가구는 매우 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송경호, 2024).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은 실증분석 및 OECD 회원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최승문·신선화, 2018). 특히 과표현실화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또한 취약 가구에 대한 합리적 고려, 1주택자 요건에 실거주 요건 적용,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단기적인 부동

표 2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국제비교

(단위: %)

	총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4.3	5.2	5.4	5.2	4.9	4.9	0.7	1.0	1.1	1.1	0.9	0.9
OECD 평균	4.3	4.3	4.0	3.7	3.8	3.8	1.1	1.1	1.0	1.0	0.9	0.9
G7 평균	9.3	9.2	8.3	7.8	8.0	8.1	2.2	2.1	2.0	1.9	1.9	1.9
캐나다	10.5	10.4	9.2	8.8	8.6	8.4	3.1	3.2	2.9	2.7	2.7	2.6
프랑스	12.2	11.4	10.0	9.3	9.7	10.2	2.6	2.4	2.1	2.0	1.9	1.9
독일	1.8	1.8	1.7	1.6	1.6	1.6	0.4	0.4	0.4	0.4	0.4	0.4
이탈리아	5.1	4.4	4.2	3.9	3.7	3.5	1.5	1.3	1.2	1.1	1.1	1.0
일본	10.1	10.1	9.3	9.2	9.3	9.3	1.9	2.0	1.9	2.0	1.9	1.9
영국	11.7	11.2	10.3	10.1	9.8	9.9	3.0	2.9	2.8	2.8	2.7	2.8
미국	13.4	14.7	13.0	11.8	13.4	13.6	2.7	2.8	2.7	2.6	2.6	2.7

주 1. 부동산 보유세는 OECD코드4100(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을 기준으로 산출  
 2. 우리나라의 보유세에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사업소분) 등 세수가 포함되어 있음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4년 미발표국(호주, 그리스)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인용

산 대책으로 자주 개편되는 것보다는 조세 정책으로 조세 형평성 및 국가 경제 효율성 제고라는 큰 차원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 장기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2024년 기준 총조세 대비 4.9%, GDP 대비 0.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G7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 총조세 대비 5.4%, GDP 대비 1.1%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완화해 공정 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독일, 부동산 재산세 개혁 진동

독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재산세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

에서 세 부담이 최대 세 배 가까이 늘면서 이에 불복한 납세자들의 위헌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를 교훈 삼아 신중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독일은 개정된 재산평가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과거 동·서독 시절 제각각이던 부동산 과세 기준 시점을 2022년으로 개편해 현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 가능한 유휴 토지에도 세금을 새로 부과해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는 구조를 도입했다.

독일의 재산세 개혁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지목된다.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소득세 과세 기반은 약화되면서 보유세를 높이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독일은 취득세 부담이 커 재산세 비중을 낮게 유지해 왔지만,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관련 세율을 높였다.

하지만 독일의 급격한 세율 인상은 반발을 불러왔다.

베를린·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개혁 이전보다 세금이 평균 135%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산세 이의신청 건수만 수백만 건에 달하고 납세자들의 위헌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독일 정부는 결국 보완 입법을 추진해 재산세 개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25).

보유세 개혁은 대중세라 사회적 반발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히 올리기보다 전체적으로 서서히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국 역시 독일처럼 높은 취득세 부담으로 재산세를 비교적 낮게 유지해 왔고, 고령화 문제도 안고 있어 비슷한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 사례는 단순히 세금 조정이 아니라 고령화와 재정 수요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개혁이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고, 개편 방향성은 피할 수 없지만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치며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재산세를 단순비교하는 작업은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연방제 국가의 경우 연방 수준의 보유세가 없으며 각 주마다 과세 주체,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구조, 감면 및 공제 등이 상이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지방별로 세부 내용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재산세 세율은 비례 세율 구조이며, 동일 주 내에서도 시, 카운티 별로 혹은 대상 재산별(부동산/동산, 주거용/상업용 등)로 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세는 주로 지방 정부의 세입 부족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세율이 법에 고정세율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출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다른 세입 수단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잔여세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 기타 지방세 수입,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부동산 실효세율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공식적인 국제비교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실효세율 산정을 위한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OECD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사용하나, 국가별 통계생산방법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행정자료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추정하지만, 다른 나라는 주택 등 건축물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산출하는 등 부동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국민대차대조표의 토지가치 추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양도 및 취득세부담을 줄이고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높여 지역 정책에 의해 혜택을 본 집주인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처럼 가치 평가는 중앙이 하고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 역시 중앙이 고려하는 현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거래세와 보유세의 총체적인 개편을 위한 큰 열개가 마련되어야 한다. 🌐

## 참고자료 |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2026.3.
- 송경호, 「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2.
- 윤영훈, 「주요국의 부동산관련 세부담 비교」, 「조세브리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5.
- 차은혜·이석희, 「재산세이론관점에서 과세체계 현황분석 - 토지 및 건축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석」 제7권 제3호, 한국부동산원, 2021.11.
- 최승문·신선화,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12.
- 한국지방세연구원, 「독일 재산세 개혁과 시사점」, 2025.9.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 OECD 재정 분야 주요 회의에서의 공공재정 회복 논의 전망

글.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2026년 5월 27일과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본부에서는 재정 분야의 주요 국제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별도로 개최되던 고위 예산당국자 회의(SBO, Senior Budget Officials), 의회예산기구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PBO & IFI,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최고감사기구 회의(Auditors-General and Hea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가 올해에는 통합 개최되며, 첫날인 5월 27일에는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을 주제로 세 회의의 합동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를 이처럼 합동으로 조직한 것은 재정 문제를 단순히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한다. 고령화, 보건 및 요양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국방비 증가, 인공지능 전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재정에 대한 중첩적인 압력하에서 정부의 예산운용, 의회의 재정심사 및 분석, 감사기구의 성과 및 효율성 점검이 함께 작동하는 재정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의회예산기구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지출의 도전과제를 다룬다. 27일의 공공재정 회복 포럼 합동 세션 논의를 바탕으로, 의회와 의회예산기구가 장기재정압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 있는 예산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총액 중심의 예산심사(Top-down Budgeting) 및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이해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공유하고, 네 번째 세션에서는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의회

예산기구의 재정 전망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제 설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재정 논의는 재정 수지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전망을 넘어, 중장기 지출 압력의 원인과 구조,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재정 위험의 조기 식별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지, 보건, 연금, 돌봄, 기후, 국방 등 다양한 지출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단년도 예산 분석을 넘어 중기·장기 시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공공재정의 회복’이 단순히 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출의 효율성, 정책 우선순위의 재정립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무국에서 준비 중인 회의 문서 초안에서는 회원국들의 최신 재정 개혁 사례와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소개하며, 한편으로는 지출의 효율화와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을 위한 전략적 유지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사무국의 회의 문서 초안은 연금, 실업·질병·장애 관련 지출, 가족·아동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에너지·기후 관련 가계 지원 등 주요 지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각 회원국이 최근 어떻게 해당 분야의 재정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고, 둘째, 단순 삭감보다 지출 구조의 효율화와 제도 개편을 중시하며, 셋째, 중장기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가계 지원 분야를 예로 들면,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광범위한 지원을 점차 조정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나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단순한 지출 규모 축소보다는 입원 중심 구조를 외래, 지역사회, 1차 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의약품 공동구매, 디지털화, 행정 효율화 등을 통해 성과 개선을 추구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재가 서비스 확대, 가족 돌봄 지원, 돌봄 제공 방식의 재설계 등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개시연령 조정, 기대수명 연계 장치 등 장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제도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회의 문서 초안에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정비하되, 향후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폭넓게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보건의료의 예방 및 1차 의료 강화, 장기요양의 재가 서비스 기반 확충, 기후 적응 및 재난 대응 투자, 디지털 전환과 인적 자본 축적 등은 단기 지출로만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러한 분야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 완화와 경제·사회적 회복력 제고 측면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다.

즉,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논의될 ‘공공재정의 회복’은 단순한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 위기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사무국에서 준비 중인 초안에는 이를 위한 각국의 사례와 정책방향이 폭넓게 담겨 있으며, 5월 말에 열릴 이번 회의는 그러한 논의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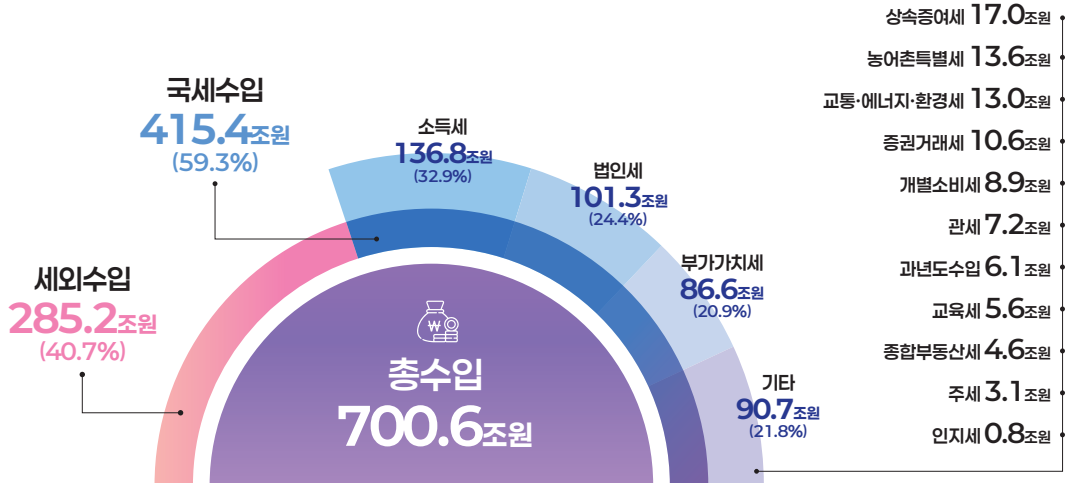
# 나라살림의 기반을 보여주는 조세통계



글.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 성지영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

NABO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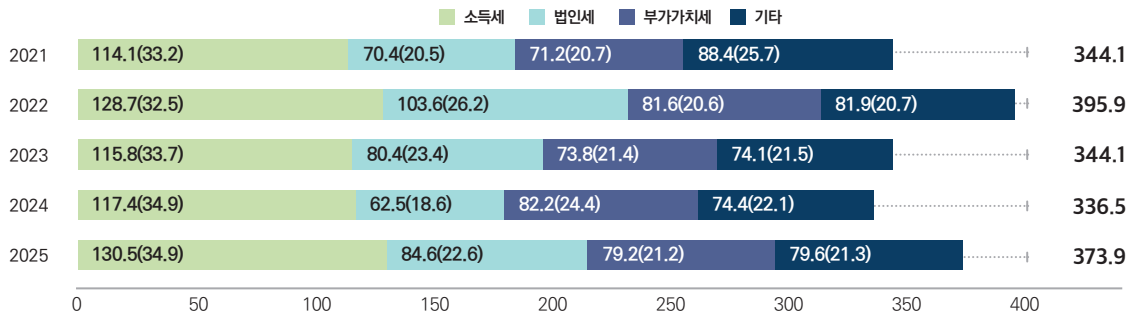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총수입 중 국세수입 비중 및 세목별 수입 구조



주 1.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포함  
 2. 기타는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및 과년도수입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보시스템

## | 연도별 국세 세목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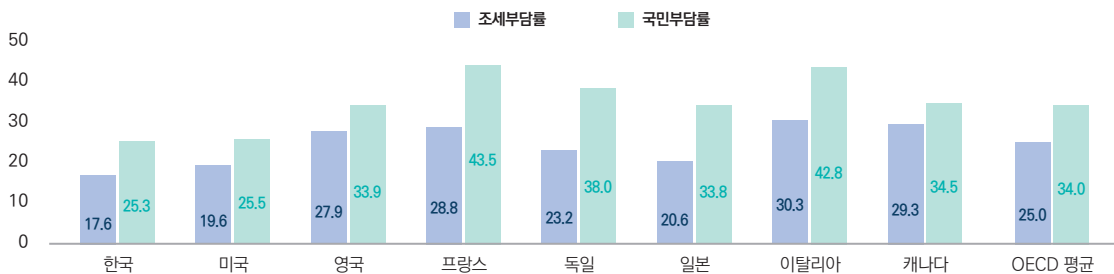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주 기타는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및 과년도수입이 포함됨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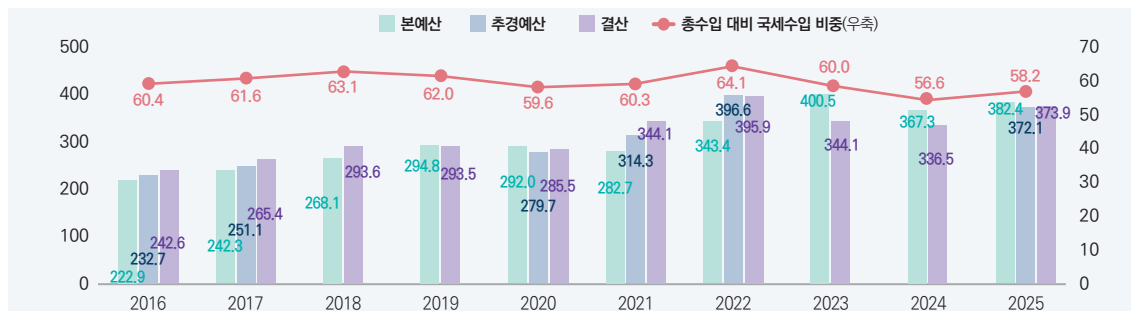
주 일본은 2024년 자료 미제출 국가로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였음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많은 적든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 즉 조세는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데 주된 수입원이 된다.<sup>1)</sup> 2026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 700.6조원 중 59.3%인 415.4조원이 국세수입으로 계획되었다.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수입 642.4조원 중 57.9%인 372.1조원을 국세수입으로 계획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373.9조원이 수납되었다.<sup>2)</sup>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하 NABOSTATS)을 통해 국세수입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실적은 2016년 242.6조원에서 2025년 373.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은 경기회복 및 자산 관련 세수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법인 실적 개선과 소득 여건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NABOSTATS을 통해 국세수입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약 60% 수준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총수입 대비 국세수입 비중 및 국세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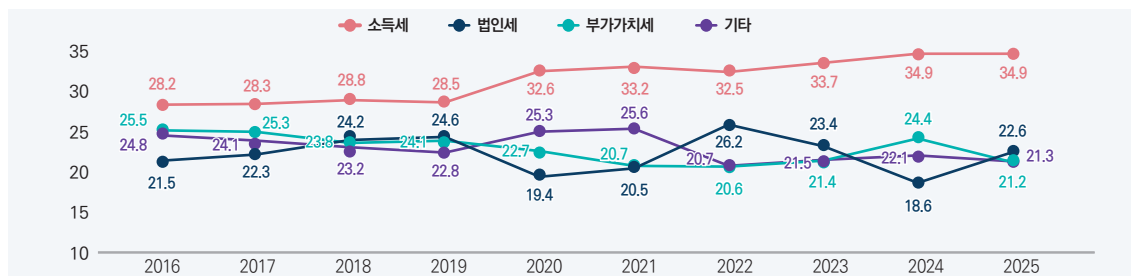
주 총수입은 결산금액 기준(단, 2025년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재정통계/조세통계-재정총량/기초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NABOSTATS에서 제공하는 국세 세목별 수입구조를 보면, 최근 10년간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3/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국세 세목별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기초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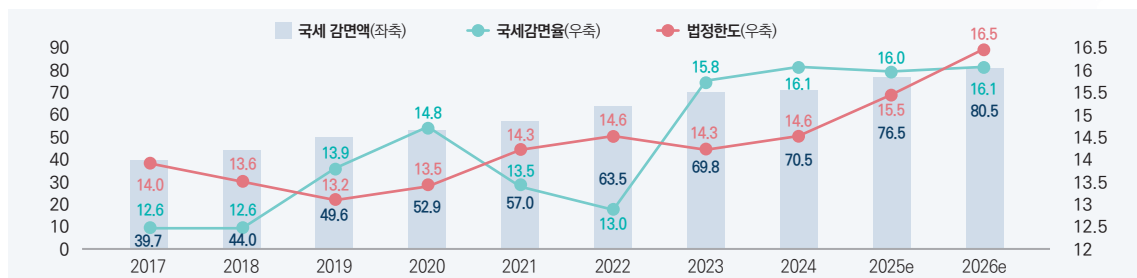
1) 정부는 조세 이외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자 등의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 다만, 이러한 초과수납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3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예산 382.4조원과 비교하면 8.5조원 적은 규모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사회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의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감면을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sup>3)</sup>

최근 10년간 국세감면 규모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2025년과 2026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 2024년, 2025년은 연속하여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sup>

그림 3 국세 감면액 및 감면율

(단위: 조원, %)



주 2025년과 2026년은 「2026 조세지출예산서」 전망치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조세특례 / 대한민국 정부, 「2026 조세지출예산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조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을까?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부담률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세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까지 포함한 지표가 국민부담률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보다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22.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경기둔화와 감세에 따른 조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9.0%, 17.6%로 하락하였다. 국민부담률 역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5년 22.6%에서 2022년 29.7%까지 상승하였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6.8%, 25.3%로 하락하였다. NABOSTATS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및 G7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국세감면율은 국세 감면액을 감면 이전의 국세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로 정하고 있다.  
 4)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회는 2025년 12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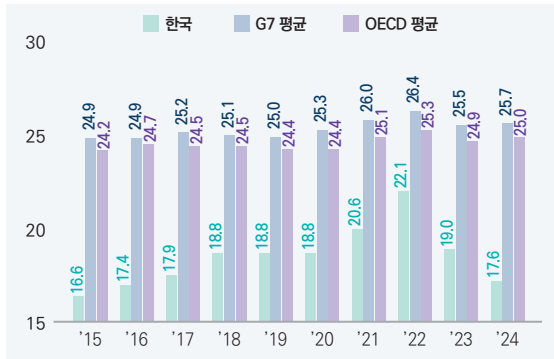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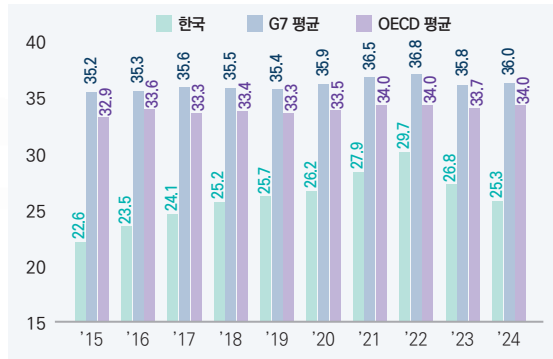


그림 5 국민부담률

(단위: %)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조세통계-국제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NABOSTATS은 국세수입실적, 국세감면액,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뿐만 아니라 세목별 예결산 실적 및 세율변화, OECD 국가 비교 등 다양한 조세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세법개정 내용 및 조세정책 동향을 반영한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고 있는데, NABOSTATS의 통계와 보고서를 함께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및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nabostats

##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심사 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 [www.nabostats.go.kr](http://www.nabostats.go.kr)

# NABO 발간보고서 소개

## NABO 분석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정부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민간 R&D 축진의 구조와 시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2월 27일
2026 대한민국 재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3월 18일
2026 대한민국 조세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3월 24일
2026년 NABO 경제전망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3월 27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4월 1일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4월 29일

##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제5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2월 24일
NABO 산업동향&이슈(제80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2월 25일
NABO 대외경제동향&이슈(제5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3월 20일
NABO 경제동향&이슈(제140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3월 25일
NABO 산업동향&이슈(제81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4월 23일
2025 NABO 연차보고서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3월 6일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3월 20일
[NABO Focus 제134호]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2월 2일
[NABO Focus 제135호]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2월 5일
[NABO Focus 제136호]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월 10일
[NABO Focus 제137호] 2025년 국제수입 실적 및 세목별 증감원인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2월 12일
[NABO Focus 제138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유통의 핵심 경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2월 26일
[NABO Focus 제139호] 가담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월 27일
[NABO Focus 제140호] 유럽의 관문에서 부가가치 허브로 네덜란드 수출 구조의 정책적 함의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3월 6일
[NABO Focus 제141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3월 10일
[NABO Focus 제142호] K-수출 7천억달러 달성의 의의와 과제: 독일과 일본의 교훈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3월 18일
[NABO Focus 제143호]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3월 19일
[NABO Focus 제144호] 주요국 조세정책 최신 트렌드 토크아보기(1) -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3월 24일
[NABO Focus 제145호]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3월 26일
[NABO Focus 제146호]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3월 31일
[NABO Focus 제147호] 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토크아보기(2) -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4월 2일
[NABO Focus 제148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월 7일
[NABO Focus 제149호]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4월 9일
[NABO Focus 제150호]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4월 14일
[NABO Focus 제15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4월 16일
[NABO Focus 제15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4월 17일
[NABO Focus 제153호] AI 등 혁신분야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4월 21일
[NABO Focus 제154호]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4월 23일
[NABO Focus 제155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그 다음 과제는?: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4월 28일
[NABO Focus 제156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4월 30일
[NABO Focus 제157호]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4월 30일

※ 발간된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와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민간 R&D 촉진의 구조와 시사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년 기준 OECD(2025. 12.) 1.7%, 국회 예산정책처(2025. 10.)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R&D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정부 R&D 예산 집행의 낮은 효율성과 질적 성과지표의 정체 등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R&D가 민간 혁신 및 R&D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부 R&D 지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민간 R&D 특히 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술 밀집도는 시차를 두고 민간 특히 성과에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를 보였다. 기술공간 분석 결과, 정부 R&D는 민간에 비해 기초·원천 기술 성격이 강한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민간 R&D는 인공물 및 응용 기술 중심으로 더 분산적이고 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 R&D 기술 밀집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민간 특히 성과가 1~3년의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활동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지식은 3~4년의 시차를 두고 민간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며, R&D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 지식자산 스톡은 3~4년의 시차를 두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소규모 기업에서 더 뚜렷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분야별 정부 R&D 투자는 민간이 초기 위험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R&D 투자로 축적된 지식 자본이 향후 기초·원천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신규 진입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민간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부 R&D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 필요가 있다. 특히 건수 등 양적 평가 위주의 성과지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R&D의 질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R&D 예산 배분 및 성과관리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정부 R&D 지원 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 정부 R&D를 통해 축적된 지식자산의 민간 파급효과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R&D 투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026 대한민국 재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26 대한민국 재정」은 통계자료를 2026년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전년 대비 주요 재정제도 변화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재정의 이해’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 주요 제도의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했으며,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관련 주요 내용을 신규로 소개하였다. 제2부 ‘2026년도 재정 현황’에서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를 다루었다. 제3부 ‘상임위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 61개 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주요 재정제도 개편 연표’를 수록하여 연도별 재정제도의 주요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2026 대한민국 조세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최근 조세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조세 해설서이다. 「2026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의 각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하고,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 등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6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을 소개하였다. ‘제4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록에는 OECD 및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수록하였다.

## 2026년 NABO 경제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세계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최근의 내수 회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이 수출을 이끌며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동전쟁 발발 이후 대외 여건이 크게 불안해졌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며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생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나, 그 온기가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회의 결산·법률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발간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발간하였다. 제Ⅰ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 동향을 담고 있으며, 제Ⅱ부 「지출전망」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제Ⅲ부 「생산전망」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총부가가치를 분석·전망하고 있으며, 제Ⅳ부 「소득전망」은 국민총소득을 비롯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전망을, 제Ⅴ부 「지속성장」은 잠재성장률과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총지출 25.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과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2%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출발하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고유가·고환율의 충격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적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자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각 부처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본 보고서는 당초 계획 대비 제1차 공공기관의 이전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은 2019년 12월 기준, 총 105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개별지역(9개)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 포함)

사업성과 분석 결과, 총 이전 비용은 9조 1,549억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기간은 28.6개월 지연되었고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2025년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4,684명 증가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8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증가 및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세 수입은 2016~2024년 누적 2조 5,072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되어 지역 재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이전 전 퇴사율(2.66%)보다 이전 후 퇴사율(3.11%)이 상승하여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유관기관협력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여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 내 자발적 퇴사와 이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인재 채용 시 특정 대학에 합격자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사업비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전 공공기관은 사업비 집행 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후 관리 절차와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NABO 인구· 고용동향 & 이슈 (제5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 성장

출생·혼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고령화 수준과 속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2026년 1월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령별 인구 구성은 유소년 인구 10.2%, 생산연령인구 68.4%, 고령인구 21.3%로, 전년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0.4%p, 고령 인구 비중은 1.2%p 상승하였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나 청년층 고용 부진과 실업률 상승 등 일부 지표에서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2026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0.8만명(0.4%)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2025년 12월 채용은 건설업(-1.8만명)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월 대비 3.4만명 감소하였으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천명), 교육 서비스업(3천명)에서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임금은 특별급여의 큰 폭 증가(26%) 속에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하였다.

‘지속가능 성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3을 점검한 결과, 빈곤퇴치 부문에서는 여성·고령층의 빈곤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아종식·식량안보 부문에서는 청소년 영양 취약과 높은 식량 수입 의존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건강·웰빙증진 부문에서는 사망자 수 증가와 만성질환 부담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 인구·고용이슈 분석: 생성형 AI 고(高)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직과 사무직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고용이 AI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별 생성형 AI 노출지수를 국내 직업에 적용하여 생성형 AI에 고노출된 직업을 파악하였다. 고노출 직업에는 회계, 금융, IT,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직 및 전문직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2025년까지 관측된 직업별 취업자 수, 구인 및 채용 건수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가 고노출 직업의 고용을 위축시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노출 직업 고용은 ChatGPT 출시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타 직업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장세가 빨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34세 이하 청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AI와 노동이 상호 대체보다는 보완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노출 직업의 구인 및 청년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2025년 12월까지 생성형 AI의 뚜렷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한계와 AI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면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 향후 더욱 정확한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개발하여 노동시장 영향을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제80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산업동향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서비스업의 생산 확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2026년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8% 증가하였는데, 서비스업이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데 기인한다. 13대 산업의 수출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각각 550억달러, 52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3.7%, 37.2% 증가하였다. 2026년 1월 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비OPEC 국가들의 원유공급 증가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8.6% 하락한 배럴당 63.7달러를 기록하였다. 2026년 1월 농산물가격지수도 생산량 증가와 수요부진 등에 따라 옥수수과 쌀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8.9%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2026년 1월 비철금속가격지수는 미달러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2% 상승하였다. 2025년 12월 배출권(KAU24) 거래량은 804.9만톤으로 전월 대비 53.7% 증가하였고 종가는 톤당 1만 400원으로 전월 대비 5.5% 하락하였다.

### 산업이슈 분석: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의 의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2025년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과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 이에 대해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제기될 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의 역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 앞서 연간 수출액 7,000억달러에 도달했던 국가는 미국(2000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독일(2003년), 네덜란드(2018년)이었으며, 이 중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7,000억 달러 달성 이후 신흥국의 성장과 글로벌 디지털화 추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장기적인 수출 정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수출 품목의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및 통상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제5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대외경제동향

세계경제는 주요국 간 경기 흐름의 차별화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진경제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일본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별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다. 신흥경제는 내수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나, 인도·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으로의 투자 집중은 향후 수익성 및 생산성 개선이 미흡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제금리가 금리인하 기대 및 물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선진국에서 제한적인 상승에 그친 반면, 신흥국은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환율은 미국의 정책 요인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 대외경제이슈 분석: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현황과 시사점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 심화로 대안적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심 내 3차원 항공 교통망을 구축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부상하고 있다. UAM은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이자 핵심 전략산업으로 평가된다.

주요국은 UAM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주도권 확보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UAM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유럽은 통합 규제체계를 구축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저공경제' 전략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및 로드맵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UAM은 서비스 및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되는 융복합 생태계로 발전할 전망이나, 기술 인증 지연, 제도 미비, 수익성 불확실성, 사회적 수용성 부족 등은 상용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인증 기반 강화, 핵심 부품·기술 중심의 공급망 확보,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서비스 중심 산업 확장을 통해 UAM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140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 수출 호조,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 등 개선 움직임이 강해졌으나, 건설투자의 부진,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등 불안요인도 혼재하고 있다.

2026년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제조업 생산은 2.1% 감소, 서비스업은 0.0%로 횡보하였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소매판매액은 2.3% 증가하였다. 건설기성액은 전월 대비 11.3% 감소, 설비투자는 6.8% 증가하였다. 2025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 기준 전년 대비 59.9조원 증가하였다. 2월 무역수지는 155.1억달러 흑자, 수출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하였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61bp를 기록하였다. KOSPI지수는 전월말 대비 큰 폭 상승하여 6,244를 기록하였다. 12월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상승, 주택매매거래량은 감소하였다. 12월 기업대출은 전년 대비 55.1조원 증가, 1월 주식·회사채 발행액은 17.7조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월 원/달러 환율은 1,424.5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2월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증가한 4,2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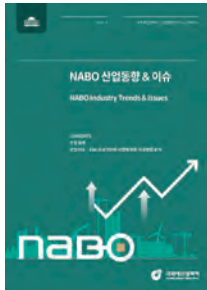
### 경제이슈 분석: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정책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021년부터 아시아를 제치고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9%를 차지하였다. 대미 직접투자 중에서도 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직접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상위 3개 투자 업종은 그동안 시행된 미국 행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에 따라 2020~2023년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였다.

그간 대미 직접투자를 보면, 현지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등 국내와의 연계성이 유지되는 한편,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실증한 결과, 대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경우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율이 0.07% 증가하는 보완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확대 과정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소재·부품·공정 등 핵심 역할을 국내에 보전하고 관련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제81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수요 증가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2월 말 중동전쟁 발발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하방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0.5% 증가에 그쳤는데, 서비스업이 전년동월 대비 2.1%, 건설업이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한 반면, 제조업이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3일) 축소로 전년동월 대비 1.8% 감소한 데 기인한다. 13대 산업의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SSD 수요 급증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2026년 2월과 3월 각각 546.5억달러, 703.2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6.4%, 55.0% 증가하였다. 2026년 3월 유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송 제한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5.2% 증가한 배럴당 95.6달러를 기록하였다. 2026년 3월 비철금속가격지수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리스크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3.0% 상승하였다. 2026년 3월 농산물가격지수도 대두와 소맥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5.1% 상승하였다. 2026년 2월 배출권(KAU24) 거래량은 347.2만톤으로 전월 대비 8.9% 감소한 반면, 증가는 톤당 1만 3,750원으로 전월 대비 10.9% 상승하였다.

### 산업이슈 분석: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내 현황 분석

파리협정 이후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ESG 공시가 기업 평가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6년 2월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2026년 4월 이후 확정 예정). 이에 본 보고서는 KOSPI 819개사(2025년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ESG 공시 현황 및 공시의 유인 요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ESG 자율공시 상장사는 2021년 78개사에서 2025년 225개사(27.5%)로 증가하였으나, 중소형사(8.7%)·제조업(22.7%)은 전체 평균(27.5%)을 하회하며 규모·업종별 양극화가 관찰되었다. ESG 공시 유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자산 규모·국민연금 투자액·ETS 대상 여부가 ESG 공시의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Y27 의무화 대상(연결자산 30조 원 이상 59개사)의 85%는 이미 공시 중이나, 금융·보험업 위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BAM 대상이면서 자산 30조원 미만인 제조업 70개사는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채 ESG 공시 의무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기초 마련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인프라 지원,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신설 및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15권 제1호

#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발간일 2026년 3월 20일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NABO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nabo.jams.or.kr)을 통해 논문을 상시 공모하고 있다.

※ 본문은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1호에 수록된 논문초록으로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 한국 사회보장의 생애주기별 분포와 세대 간 형평성

제1저자

이상은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신저자

정찬미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의 ‘노인 편향’ 우려가 있으나, 기존 연구는 사회 서비스와 교육 영역을 배제해 아동기 투자를 과소추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과 서비스(교육 포함)를 포괄하는 총급여, 총부담, 그리고 순급여의 생애주기별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세대 간 재분배 구조와 빈곤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보장 급여는 아동기와 노년기에, 부담은 근로연령기에 집중되어, 순급여는 근로연령기(순부담)가 아동-노년기(순수혜)를 지원하는 뚜렷한 생애주기 재분배 구조를 보였다. 둘째, ‘노인 편향성’에 대한 평가는 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졌다. 직접적인 현금과 서비스만 고려할 때 노인 편향이 강했으나, 교육을 포함할 경우 아동기 급여가 노년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세대 간 배분이 비교적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빈곤을 가장 크게 완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급여만큼 사회서비스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자원 배분이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볼 때 특정 세대에 편향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의료·요양) 비용의 급증은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도전 과제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행정데이터 기반의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정례화하여, 향후 현금과 서비스, 세대 간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제도 도입과 기금 적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저자

강현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박사과정

교신저자

이제경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와 기금 적립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석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6개년으로 설정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속변수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독립변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기금적립률, 제도 도입연도인 2020년 전과 후)로 설정하고 패

널 회귀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적립률’과 ‘제도 도입’은 ‘통합재정수지비율’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적립률’이 높아질수록,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할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의 경제 및 후생 효과

### 제1저자

임태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한중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본 논문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건강상태가 연령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하는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와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수들을 설정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확대되면 일반재정에서 부담해야되는 추가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소비세율인상,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 세 가지 방안을 분석한다. 더불어 국고지원이 일몰되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총 네 가지 방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고지원 확대의 효과는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달라진다. 국고지원 확대 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율인상은 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자본소득세율 인상은 총생산을 감소시킨다. 반면, 국고지원이 일몰되면 총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다. 사회 후생 변화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래 세대의 후생은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율인상에서 개선되지만 자본소득세율인상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반면, 현재 세대는 지출구조조정에서만 후생이 개선되고 소비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면 후생이 악화된다. 국고지원이 사라지는 경우는 미래 세대와 같이 현재 세대의 후생도 감소한다.

## 시계열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의 GDP 추세 및 순환 분해: Hamilton 필터와 Beveridge-Nelson 필터를 중심으로

저자

소인환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경기 분석에서 순환 요인은 보통 실제 GDP로부터 추세 요인을 차감하여 측정하는데, 추세는 비관측변수이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중 Hodrick-Prescott 필터 등 시계열 접근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추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Hamilton 필터, Beveridge-Nelson 필터를 한국의 GDP에 적용하여 두 요인을 분해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주파수 영역 방식의 필터들과의 차이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두 필터를 이용한 경기 순환 추정치들은 기존 필터들에 비해 신규 관측 데이터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추정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Beveridge-Nelson 필터의 경우 향후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예측력도 기존 필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제의 농가특성별 소득분배 효과

저자

허등용

경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및 지역개발연구소 운영위원

본 연구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 시점에 기존 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이 각각 지급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농가경제조사 미시자료(2018~2022년)를 활용하여, 경지 규모·영농형태·경영주 연령별로 농가를 분류하고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GE(0)]를 이용해 불평등을 집단 내 및 집단 간으로 분해한다.

분석 결과,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보다 농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공익직불제는 전체적인 농가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농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면서 동일한 농가 특성을 가지는 집단 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또한 공익직불제는 모든 농가 특성별로 집단 내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특성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정부가 향후 공익직불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정책목표가 경지규모로 구분한 농가의 집단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면 지급체계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영농형태로 구분한 농가의 집단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면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 NABO NEWS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문단 면담



NABO는 지난 2월 26일(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문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등과 더글라스 서덜랜드(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국 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한국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조세제도 개혁방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제8기 제1차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NABO는 지난 2월 26일(목) 제8기 제1차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8기 편집위원회 구성을 맞아 위원들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신임 김춘순 위원장의 진행으로 향후 학술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더 많은 소식은 [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 의회 간 협력 토론회 개최



NABO는 지난 4월 2일(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및 학계, 지방의회 비용추계 담당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제4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연례회의 개최



NABO는 지난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에 걸쳐 OECD와 공동으로 「제4회 아시아 의회 예산기구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례회의는 “국회의원의 재정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주제로 재정 전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 분석에서의 AI 사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일정은 4월 15일(수) 사전세션 및 환영리셉션, 4월 16일(목) 개회식 및 본 세션, 4월 17일(금) 워크숍 및 양자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 FISCAL STORY

---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경제 용어 사전:

조세지출

80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OTT 서비스 확산과 영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조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82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1929년 대공황, 100년 전 사건이 오늘날의 경제에 주는 교훈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86

예술 속 재정·경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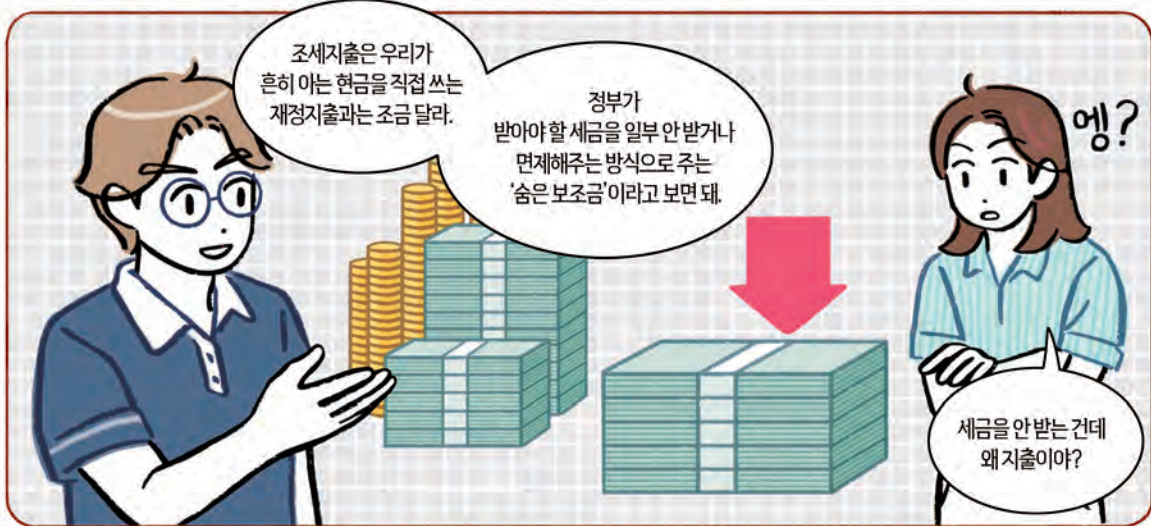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효과’로 보는 극작가 문화자산화의 재정 효과

김현식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90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 조세지출



그냥 현금으로 주지, 왜 복잡하게 세금을 깎아줘?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모두에게 현금을 주기보다는, 특정 대상이나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거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 주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애를 들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로 주거 안정을 돕고, 자녀 세액공제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하려는 의도야.

기업에도 AI나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금을 대폭 깎아줘.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투자를 유도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인 셈이지.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매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혜택을 줄지 말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동시에 '조세지출예산서'로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하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와 철저한 분석을 거친 혜택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똑똑한 정책이 되겠네!

그렇지!



## OTT 서비스 확산과 영화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조

글. 양재찬 | 데스크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오징어게임 | © 넷플릭스 Netflix  
 킹덤 | © 넷플릭스 Netflix  
 D.P | © 넷플릭스 Netflix  
 파반스 | © 넷플릭스 Netflix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비즈니스의 대표 주자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The-Top media service)가 꼽힌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2020년 초부터 2년 넘게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형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신작 영화가 개봉돼도 극장에 가는 것을 꺼려 영화산업이 침체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가 일상화하고 감염자들이 자가 격리하는 상황에서 OTT 이용자가 급증하며 각광을 받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nline Video Streaming Service)가 영상 콘텐츠 소비 채널의 주류(main streaming)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2

년 초부터 서서히 사라졌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형 변화는 가속화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바뀐 소비자의 영상 콘텐츠 이용 행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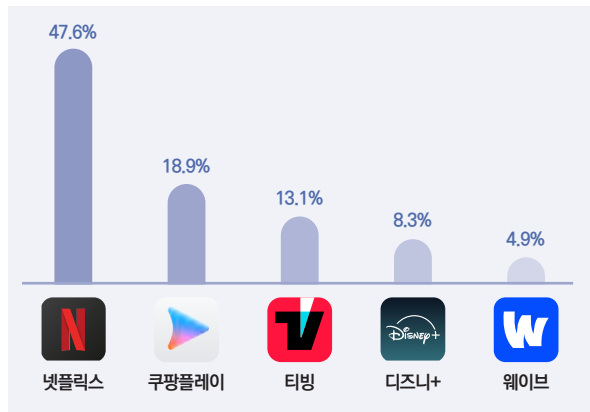
### 영화 소비 주요 채널로 자리 잡은 OTT

OTT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OTT로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애플(Apple)TV+ 등이 있다. 국내는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디즈니+ 순서로 구독자를 확보했다.

OTT 플랫폼은 구독 기반 또는 광고 기반 서비스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OTT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다는 점이다. TV 방송처럼 주어진

그림 1 주요 OTT 플랫폼별 이용률

(응답자 6,554명, 복수 응답)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콘텐츠 이용 형태 조사'

시간에 시청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콘텐츠 시청 장소나 공간의 제약도 없다. 인터넷 통신이 이뤄지는 곳이면 지구촌 어디서든 볼 수 있다.

편리한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OTT가 빠른 속도로 영화 관람객을 흡수해 극장 관람객이 급감했다. OTT가 급성장하면서 영화 제작 및 유통, 극장 산업 구조도 변화했다. 과거 극장에서 먼저 영화를 개봉한 뒤 몇 달 지나 TV나 DVD를 통해 배급되던 것이 이제 극장 개봉 후 불과 몇 주 안에 OTT로 일반에 공개된다. 그 결과 영화의 극장 독점 상영 기간(theatrical window)이 과거 90일에서 약 45일로 단축됐다.

나아가 OTT 플랫폼은 자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나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것이다. OTT 플랫폼은 새로운 제작 및 투자 시장을 형성했고, 기존 영화 제작 인력과 시스템을 흡수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

2025년 12월 5일, 넷플릭스가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사 워너브러더스의 영화·스트리밍 사업 부분을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한 것은 OTT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과 유럽 당국의 강도 높은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다른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케이블 네트워크를 포함해 1,100억달러의 적대적 인수를 제안하자 넷플릭스가 포기했다. 전통 영화사와 빅테크 스트리머 간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영화산업 침체는 세계적 현상이다. 국내 영화시장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침체의 길에 접어들었다. 2025년 국내 영화관 매출은 약 1조 470억원으로 2019년(1조 9,140억원) 대비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화 관람객 수는 2억 2,600만명에서 1억 600만명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콘텐츠도 빈약해졌다. 2023년 상업영화 평균 투자 수익률이 -31%를 기록하며 위축되자 연간 개봉 편수는 2019년 1,740편에서 2025년 585편으로 66% 감소했다. 개봉작 감소가 관객 이탈을 부르고,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OTT 서비스 확산과 뮤지컬·스포츠 등 대체재 부상이 영화 산업의 위기와 극장 경영난을 심화시켰다.

물론 영화사와 영화관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등 국내 영화관들은 과거 스크린 수 확대와 티켓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간 효율화와 수익 다변화 전략을 쓰고 있다. 4DX, ScreenX, 돌비 시네마 등 특수 기술관 및 프리미엄 상영관을 확충해 OTT가 할 수 없는 극장만의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상영관 일부를 스포츠 시설이나 전시관으로 개조해 관람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영화 대신 스포츠 중계, 콘서트, 강연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 극장 개봉 6개월 뒤 OTT 공개, 한국 영화 살릴까

국내 영화 산업과 극장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영화계 안팎에서 이뤄지

고 있다. 그 핵심 의제는 극장 개봉 이후 OTT 유통까지의 유예 기간을 법으로 정하자는 홀드백(Hold-back) 의무화 법률 개정 문제다. 극장 상영 이후 OTT 공개까지 6개월 의무 기간을 두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극장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홀드백이 극장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고, 이는 다시 제작 투자에 쓰이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논리에서다. 지금처럼 OTT 중심 소비가 확산되면 스크린과 사운드 등 극장 인프라를 전제로 한 영화 연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가세한다. 일각에서 흥행이 저조한 작품에 한해 홀드백 기간을 단축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화 제작·투자·배급 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홀드백 규정은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적 입법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유통 시장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영화산업은 극장 상영 이후 PVOD(프리미엄 주문형 비디오), IPTV(인터넷TV), OTT로 이어지는 다층 유통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데, 일률적으로 기간을 규제하면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흥행에 실패한 작품은 빠르게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홀드백이 이를 막아 제작비 회수와 다음 프로젝트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홀드백 제도는 어떤가?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극장 독점 기간을 90일에서 45일 안팎으로 줄였다. 작품 성과에 따라 17일 만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문화정책 차원에서 영화관 보호를 위해 36개월의 긴 홀드백을 유지해 온 프랑스 정부도 OTT 확산에 대응해 최근 9~17개월(디즈니+ 9개월, 넷플릭스 15개월, 애플TV+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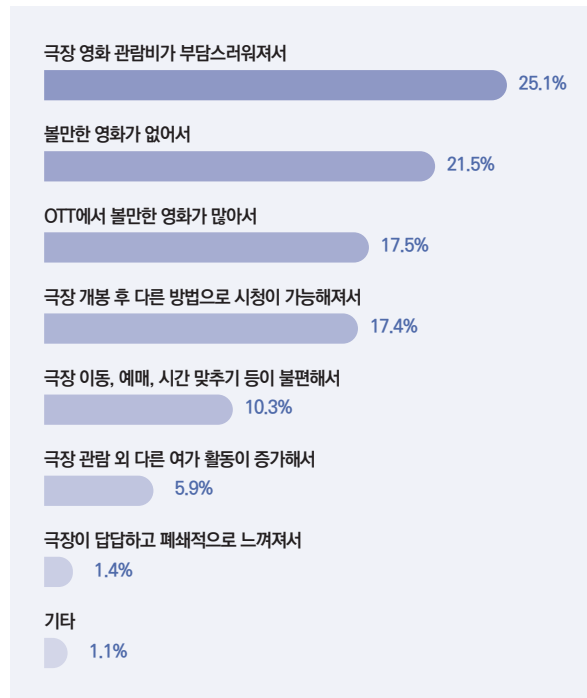
개월)로 줄였다. 영상 콘텐츠 유통 경로가 다양화하면서 극장 독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극장 침체의 원인을 OTT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영화 콘텐츠 소비 트렌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극장 관람 빈도 감소 이유는 ‘영화 관람비가 부담스러워서(25.1%)’, ‘불만한 영화가 없어서(21.5%)’가 과반을 넘는다. ‘OTT에서 불만한 영화가 많아서(17.5%)’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참여연대와 영화인연대가 지난 2월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관람 감소 이유’ 설문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티켓 가격이 부담(67.7%)’이라는 응답 비중이 ‘OTT 등으로 보는 것이 편해서(48.1%)’ 비중보다 컸다. 홀드백 규제가 극장 수익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2 극장 관람 빈도 감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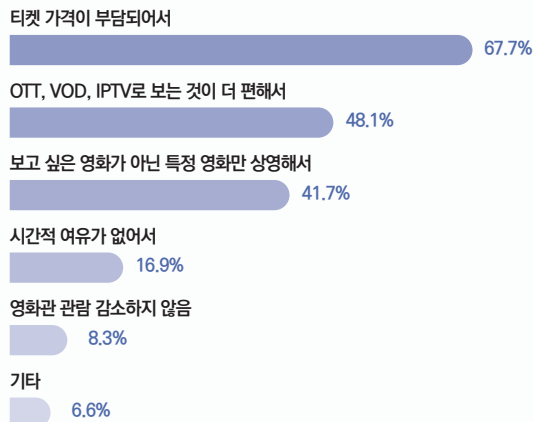
(응답자 1,024명)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콘텐츠 소비 트렌드 연구'

그림 3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관람 감소 이유

(응답자 638명, 복수 응답)



자료 참여연대·영화인연대,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영화 관람객의 티켓 가격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월 4일 개봉한 지 61일 만에 1,6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어 4월 11일 '극한 직업'(2019년 개봉)을 제치고 역대 흥행 2위 영화로 등극했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콘텐츠가 담보된다면 극장은 언제든지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2월 11일 개봉한 영화 '휴민트'는 극장 누적 관객이 200만명에 머물렀다. 그런데 극장 개봉 48일 만인 4월 1일 넷플릭스를 통해 33개 언어 자막과 20개 이상 언어 더빙을 지원받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한 지 이틀 만에 글로벌 1위에 올랐다. 극장 티켓 판매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 유연한 결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다. 국내 극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치가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국내 흥행은 극장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휴민트'의 글로벌 흥행은 OTT의 확장성을 입증했다. 이는 극장과 OTT를 경쟁과 대립이 아닌 역할 분화와 상생 구조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 극장과 OTT, 상생의 길 모색해야

OTT가 개인화된 시청 플랫폼이라면 극장은 집단적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OTT는 시공간 제약 없이 콘텐츠의 수명과 도달 범위를 넓히는 장점이 있고, 극장은 블록버스터를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과 몰입감을 주는 음향시설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다.

OTT와 극장을 제로섬 경쟁 프레임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OTT와 극장은 경쟁 관계이면서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 OTT가 영화 소비 중심 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OTT 판권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처럼 홀드백 단축과 맞바꿔 OTT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2024년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가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극장가에서 200만명 가량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과를 냈다. K-콘텐츠 열풍이 해외 영화관 시장이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배급 합작이나 공동 투자 등을 통한 영화관 상영을 위한 영화 수출을 추진해볼 만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글로브, 그래미, 아카데미상 그랜드슬램으로 K-컬처가 주목받는 지금이야말로 100년 역사의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때다. 



# 1929년 대공황, 100년 전 사건이 오늘날의 경제에 주는 교훈은?



대공황 당시 무료 급식소에 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구직자들

## 세계를 휘청이게 만든 미국발 경제 거품

2008년 리먼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검색엔진 구글에서는 한 키워드의 검색 빈도가 치솟는다. 바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다. 사람들은 왜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대공황이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회자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대공황의 시작점은 주식시장이었다.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후 미국은 전시경제체제의 종료 및 스페인 독감으로 잠깐의 침체를 겪었지만, 그 후 전례 없는 10여 년간의 호황을 경험한다. 전후 복구 혹은 배상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던 유럽 각국에 비해 미국의 공업 부문은 지속적 성장했고 기업들의 수익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끝은 주식시장 광풍으로 장식됐다. 1928년 초 191포인트였던 다우 지수가 381포인트까지 상승했고, 금융인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구두담이까지 주식 이야기로 열을 올렸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모두가 열광하는 상황이었다.

주식시장의 버블은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이어졌다. ‘검은 목요일’ 이후 수일간 30% 가까이 폭락한 증시는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1932년 41까지 떨어져 약 88%를 상실했다. 자산시장 붕괴의 여파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수천개의 은행들이 도산했고, 1933년에는 은행 휴업령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위험을 겪으며 극도로 보수적으로 변한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시장에서는 상품의 판매 부진과 악성 재고 누적이 이어졌고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상승하고 가계의 생계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업률은 2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는 4년간 연평균 7%씩 하락하였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자 가계는 점점 더 소비보다 현금 보유를 택했으며, 농민과 기업은 제품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디플레이션으로 실질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공업과 농업 부문의 위축과 고용감소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물가를 하락시키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시 농민과 노동자들의 처참한 삶은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대공황의 여파는 193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비로소 종결되었다.

## 고전 경제학의 한계와 연방준비제도의 미숙한 대응

주식시장의 폭락이 대공황의 시발점이었지만, 사실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당시에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 180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10여 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어떤 차이가 대공황을 유달리 길고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경제학자 케인스는 당시 경제를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정상적인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는데, 가계가 소비 여력이 없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빚을 저서라도 대신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고전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기반으로 과잉생산은 일시적이며 시장 자율에 의해 해소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의 유지 외에는 담당할 기능이 없다. 더욱이 1920년대의 가파른 성장은 과잉투자로 인한 것이므로 경기 침체를 통해 이를 ‘청산’하고 건전한 경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얼마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버(Herbert Hoover)는 주식시장의 투기를 경계하는 입장이었으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주류 경제학의 통념에 따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소한 세수에 맞춰 정부지출을 축소시켰으며, 실업자를 정부가 직접 구제(현금 지원)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한편 후버 정부는 침체 상태였던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기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제조업에서도 앞다투어 보호를 요구하면서 결국 전반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되자 다른 국가들 또한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세계 무역 규모는 기존의 1/3 수준으로 격감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출 위축은 경제는 더욱 악화시켰다.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대공황을 해소하기 위해 뉴딜 정책(New Deal)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가 상승을 위해 기업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최저임금 등을 도입한 국가산업부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대공황에서 탈출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였지만 테네시강 개발 공사와 같은 일자리 창출용 공공사업의 추진,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구호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부적절성 이전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융위기를 대공황으로 이어지게끔 한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주정부들이 견제했기에 남북전쟁 이후로 중앙은행을 보유하지 못했고, 1914년에서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할 수 있었다. 연준 설립 이전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에서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했다. 어떤 은행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겪으며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자금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면 실사 건실한 은행이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파가 다른 은행들에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이 연합하여 자금을 지급해 주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곤 했다. 1907년 금융위기 당시 J.P. 모건이 은행가들을 불러모아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금 출연 협의를 이끌어 낸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연준의 등장으로 이러한 최종대부자 기능은 민간에서 정부로 넘겨진 셈이었으며, 주요 민간 은행들은 더 이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규모 은행들을 도울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당시 연준은 은행업계도 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으며, 증시가 폭락하고 은행들이 예금인출사태를 겪을 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shutterstock. 1932년 실직자 2,000명이 미국 시카고에서 벌인 시위 현장

않았다. 만 개에 가까운 은행들의 도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신용 축소를 가속화하였다. 이 사태는 1933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으로 정부가 은행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나서야 일단락될 수 있었다.

### 금본위제라는 이름의 ‘족쇄’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려 금리를 인하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이 금본위제로 복귀한 상태였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각국은 화폐가치를 금에 고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화를 확대 발행했는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전후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금본위제 유지 능력에 대한 민간의 믿음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해졌고, 이는 금본위제를 실제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리를 인하했다간 해외로 금이 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공황 상태로 접어들어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과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통화발행량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의 금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했지만, 그들이 금본위제를 사수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강했기에 아무도 파운드화를 금으로 태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투기 세력들은 영란은행에게 태환을 요구했고,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차이로 인해 금본위제를 고수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금융위기 당시 경제에 독으로 작용했다.

또 세계 각국이 금본위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국가의 고금리정책(금과의 교환비율을 유지할 목적)은 다른 경제권으로도 파급된다.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금본위제로 복귀했던 다른 국가들도 자동적으로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셈이 되었으며, 전 세계가 대공황의 여파를 공유하게 되었다. 금본위제가 ‘안정적 국제 통화 질서’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족쇄’처럼 작용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당시 금본위제로 복귀하지 않았거나 일찍 포기한 국가는 경제 침체로부터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 루즈벨트는 1933년 금본위제 포기를 선언하였는데, 이후 1937년까지 소폭의 경기 회복세를 경험한다. 그러나 균형재정에 대한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시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자, 경기는 다시 위축되었고 ‘더블딥’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공황은 통화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민간은행에게 충분한 자금을 대어해주어야 하며, 시장이 진정될 정도의 과감한 통화 및 재정을 시행하되 너무 급격한 정책 기조 변경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황기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새로운 경험을 반영해 장차 닥쳐올 또다른 위험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

# ‘셰익스피어 효과’로 보는 극작가 문화자산화의 재정 효과



스트랫퍼드 어펀 에이번에 세워진 셰익스피어 동상

글 김현식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문화를 넘어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브랜드로 기능한다. 그의 이름을 단 표와 공연, 기념품은 물론, 생가와 극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개인의 명성이 어떻게 공연장과 도시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문화자산으로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장기적 전략과 투자가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셰익스피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 극작가 문화자산화의 대표 사례가 되다

2016년 4월,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출간된 「All the World's Report」에 따르면 15개국 1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셰익스피어가 영국 내(59%)보다 영국 외 지역(65%)에서 더 인기가 있었고,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셰익스피어가 전반적으로 영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더한다고 대답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영국 방문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sup>1)</sup> 외국 관광객의 힘으로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과 5,000만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16년 출간된 「Shakespeare and the GREAT Britain Campaign」<sup>2)</sup>에서는 한 해 동안 그의 생가가 있는 도시 스트랫퍼드 어펜 에이번(Stratford-upon-Avon)의 셰익스피어 생가가족의 집을 방문한 관광객이 120만명에 이르며 도시가 3억 3,500만파운드(6,660~6,7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국 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 현 국제통상부) 고문 파민더 헤이어(Parminder Hayer)가 나서 “셰익스피어는 최대 수출품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명성 때문에 관련 콘텐츠의 수출 효과가 큰데 그의 사례가 다른 문화가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유명한 작가를 문화예술 자산으로 삼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꾀하려면 대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생가와 기념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공연장을 건립해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살펴 보자면 우선 생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상업 활동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랫퍼드 어펜 에이번(Stratford-upon-Avon)은 그가 1564년 4월 23일 태어나 성장해 아이 셋

을 두며 가정을 꾸렸던 곳이다.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버스로 1시간 30분쯤 소요된다. ‘스트랫퍼드 어펜 에이번’은 에이번 강변에 있는 스트랫퍼드(Stratford)란 뜻이다. 에이번 강가에 자리한 인구 8만명의 아담한 소도시지만, 관광객이 1년에 600만명이나 된다. 소도시에 호텔만 해도 10여 개가 되고 곳곳의 가게 이름도 셰익스피어 작품과 등장인물에서 비롯했다. 관광객은 생가 보존위원회가 관리하는 기념관 ‘셰익스피어 센터’를 둘러보고 생가로 들어서게 되는데 생가 2층에는 그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방이 보존되어 있다.

한때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경매에 나왔을 때 보존을 주장하고 주도한 이는 다름 아닌 소설가 찰스 디킨스였다. 그가 기금 모금에 앞장서 1847년, 3,000파운드에 생가 건물을 구입해 보존할 수 있게 됐고, 이후 보존위원회가 꾸려져 생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셰익스피어의 가족들이 살던 공간도 국보와 같이 대우한다는 사실이다. 생가위원회는 셰익스피어가 1582년 18세 때 결혼했던 8세 연상의 아내 앤 해더웨이가 결혼 전에 살던 저택과 셰익스피어 어머니 메리 아든이 성장했던 집, 셰익스피어 딸 스잔나와 의사 남편이 살았던 집도 매입했는데 이들 공간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심지어 생가에서 가까운 곳의 손녀 엘리자베스가 남편과 살던 집 바로 옆에 셰익스피어가 은퇴 후에 살던 집이 남아 있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와 1759년 집주인이 집을 허물기까지 했다고 하니 관광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선순환되지 않았던 시대의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글로벌 극장의 복원 철학과 그 성과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공간은 극장이다. 에이번 강을 끼고 서 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이 대표적이다.

1) <https://www.britishcouncil.org/contact/press/shakespeare-more-popular-abroad-uk>

2) <https://www.scribd.com/document/787977902/Bird-et-al-2016-Shakespeare-Is-GREAT>

1879년에 ‘셰익스피어 기념 극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지만, 1926년 화재로 전소되고 1932년 아르데코 양식으로 재건된 것인데 세계 각국에서 모금 한 돈으로 재원을 삼았다. 단지 기념 공간이 아니라 영국 연극 공연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약 700명의 제작진이 1년에 20편 정도의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 작품을 같이 올린다. 고전 작품의 지속적인 공연이 갖는 힘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곳은 런던 템스강 남쪽뱅크사이드(Bankside)다. 그가 런던으로 온 뒤 연기자이자 극작가로서 삶을 시작한 의미 있는 곳이다. 이곳의 로즈 플레이하우스(The Rose Playhouse)는 1587년에 세워진 이 지역 최초의 극장으로 셰익스피어가 활동 초기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던 공간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초기작 ‘티투스 안드ronicus(Titus Andronicus)’ 등을 선보였다. 재개발로 인해 역사의 뒷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뻔했지만 배우 로런스 올리비에를 비롯한 학자들과 대중들이 펼친 ‘세이브 더 로즈(Save the Rose)’ 프로젝트 덕에 보존될 수 있었다. 로즈 플레이하우스(The Rose Playhouse)에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한 그는 1599년 인근에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극장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글로브 극장이었다. 이 극장은 셰익스피어가 직접 설계하고, 그의 극단이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준 중요한 자료 공간이다. 개관 후 14년간 셰익스피어 시대의 수많은 연극이 공연되었지만, 1613년 공연 중 무대에서 쏘아 올린 대포의 불씨가 초가지붕에 옮겨 붙어 극장은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그 뒤에 다시 건립되어 문을 열었지만 1642년 모든 극장과 오락시설을 반대하던 청교도에 의해 폐쇄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644년에 건물마저 철거됐고 그 자리에 연립주택이 들어섰다.

주목할 것은 복원 과정이다. 글로브 극장이 철거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1970년, 사라진 극장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셰익스피어 글로브 플레이하

우스 트러스트(Shakespeare's Globe Theatre Trust)가 설립됐다. 이후 무려 17년이 지난 1987년이 되어서야 글로브 극장이 있던 자리 근처 뱅크사이드 부지에서 글로브 극장 복원 기공식이 열렸지만, 복원 작업은 치밀하고 신중했다. 전통적인 공법과 자재를 사용해 셰익스피어 시대와 같은 극장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은 1614년 새로 들어선 건물이 아닌 1599년에 지어진 건물을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극장은 애초에 독특한 모습이었다.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강 건너편 웅장한 석조건물과 달리 나무 기둥에 흙벽으로 지은 원형극장이다. 객석이 3층까지 있었으나 지붕은 초가지붕이었고, 중앙은 뚫려있어 하늘이 그대로 보였다. 다들 16세기 디자인의 복잡성과 현대 화재 안전 요건 때문에 충실한 글로브 극장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샘 워나메이커(Sam Wanamaker)와 그의 동료 다이아나 데블린(Diana Devlin)은 20년 이상 극장을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역사 고문 존 오렐(John Orrell)의 연구에 따라 글로브 극장은 16세기의 고증을 철저히 지킨 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1599년 글로브 극장 건축에 사용된 목재의 상당 부분을 가져온 건물인 ‘더 시어터(The Theatre)’의 건축 형태를 연구해 건물 설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기에 16세기 후반에 지어진 다른 런던 건물들을 조사, 최초의 글로브 극장에 대한 당시의 도면과 설계도 반영했다. 학자와 건축가들은 엘리자베스 시대 여러 건물을 교차적으로 참고해 구조, 양식, 내부, 지붕 등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고 이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대부분의 시기에 존재했던 글로브 극장의 모습을 재현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곳에서 1,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 연극을 관람했는데 원형경기장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무대 주변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관객석이 1·2·3층에 있다. 더 독특한 것은 무대 바로 앞에 마련된 공터에서 관객들이 서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1페니만 내면 서서 연극을 볼 수 있었고,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린 것이다. 원형극장은 천장이 뚫려 있어 무대와 하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초창기 18시즌 동안 공연은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의 원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게 설계되었다. 스포트라이트나 마이크와 같은 현대적인 극장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다. 공연은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걸쳐 진행되었다. 스피커, 앰프도 없었으며 모든 음악은 대부분 시대 악기를 사용하여 라이브로 연주되었다. 배우와 관객은 서로 쉽게 보고 소통할 수 있었으며 함께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글로브 극장은 공공 보조금 없이 운영되었음에도 연간 2,880만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해 냈다(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2024년 연례 보고서, 2025).

### 전통 공간 체험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활용하는지 살펴보자면 연극은 보통 5월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여름 동안 공연한다. 겨울에는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글로브 극장 특별 상영작으로 선정된 일부 작품은 극장 공연 실황을 촬영해 다음 해에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DVD 및 블루레이로 출시한다. 이런 시도는 연극을 주문형 비디오로 제공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화제가 되었다. 한편 극장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40분이 소요되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가인 가이드 겸 스토리텔러가 1599년 초연을 올렸던 원형극장의 다채로운 역사와 복원 과정을 들려주는 과정이다. 방문객들은 극장 내부로 들어가 돌출 무대와 ‘우드 오(Wooden O)’라고 불리는 지붕이 있는 좌석을 구경하게 한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연극이 어떻게 공연됐는지는 물론 현대 극장이 엘리자베스 시대 무대의 연극적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려는지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문화자산화는 단지 생가나 기념관에 머물지 않고 극작

가에 맞춰 공연장을 특화했다. 무엇보다 당대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상당히 공력을 들였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재정 예산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 관객들이 체험하고 싶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고 문화자산화가 항구적인 상품성을 갖는 투자라는 것을 입증했다. 전통적인 공간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장소 자산을 활용한 관광 전략을 기능케 하는 사례다. 아울러 당시 작품을 항구적으로 공연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작품도 접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팬심도 충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단순히 시인이나 소설가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극작가에 대한 문화자산화가 필요하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사례로 미뤄볼 때 공연 공간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위해서는 재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에 구애되지 않아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극장과 극작가가 만나는 공간을 발굴하고 마땅한 공간이 현재는 없을지라도 향후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공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어쩌다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 수상이 주는 함의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개인이나 민간이 시작했지만, 한국은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나선다면 더 효율적이다.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



©shutterstock. 소설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신축한 글로브 극장의 전경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www.nabo.go.kr



##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www.youtube.com/@nabokorea



[읽어주는 NABO 보고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데이터로 본 고용 변화



[읽어주는 NABO 보고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 논 / 문 / 공 / 모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03.20 | 06.20 | 09.20 | 12.20**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국회에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 NABO와 함께 즐기는 독자 참여 이벤트

## NABO 재정퀴즈

1.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와 실질GDP의 비율로 도출되며 국내 최종생산물의 내수 및 수출입 가격을 종합한 물가수준을 의미합니다.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를 기록한 반면 2025년 1/4~3/4분기 GDP디플레이터(잠정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및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요. 2025년 1/4~3/4분기 GDP디플레이터(잠정치)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GDP 디플레이터로 읽는 경제 흐름

- ① 2.3%      ② 2.5%      ③ 2.7%      ④ 2.9%

2. 가당음료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가당음료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총 몇 개국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단 음료에 설탕부담금! 도입 쟁점은?

- ① 85개국      ② 102개국      ③ 116개국      ④ 138개국

3.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42개 기관을 2026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요. 2026년 공공기관은 2025년 대비 몇 개 증가했을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 ① 9개      ② 11개      ③ 13개      ④ 15개

※ 매달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NABO 재정퀴즈가 진행됩니다.  
이번 호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재정퀴즈 문제입니다.

2026년 예산준추의 독자 퀴즈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로 진행됩니다.

재정에 관한 퀴즈와 초성퀴즈를 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 모두 맞춘 정답자를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예산준추 초성퀴즈

2026년부터 <예산준추>에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코너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매호 흥미로운 재정·경제이야기를 퀴즈로 만나보세요.

지면 속 단서를 찾으면 정답이 보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원래 거둬야 할 세금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주는 이른바 '숨은 보조금'이 2026년에는 약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인 재정지출과는 달리,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초성 Hint

ㅈ

ㅅ

ㅈ

ㅈ

Q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tobo2701@naver.com
-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6년 5월 15일(금)부터 6월 19일(금)까지

※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www.nabo.go.kr](http://www.nabo.go.kr)

NABO



## 건전한재정 희망찬미래